대 통 령 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과 국가균형발전 연계 전략

대 통 령 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간등록번호
12-1073500-000080-01

2022 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과 국가균형발전 연계 전략

대 통 령 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발간등록번호
12-1073500-000080-01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과 국가균형발전 연계 전략

2022.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4
3. 기대효과 ····· 5

제2장 한국판 뉴딜 & 지역균형뉴딜의 개념 정립

제1절 균형발전의 개념 및 추진방안 ····· 8
1. 균형발전 개념 ····· 8
2. 균형발전 재원과 특징 ····· 13
제2절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 19
1. 한국판 뉴딜 ····· 20
2. 지역균형뉴딜 ····· 22
3. 지역균형뉴딜의 지향 ····· 29

제3장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제1절 지역균형뉴딜 정책 과정 ····· 32
1. 지역균형뉴딜 ····· 32
2.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 35
제2절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 39
1.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 39
2.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 49
3.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검토의 시사점 ····· 53
제3절 지역균형뉴딜 추진 분야와 유형 ····· 55

1.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분야별 검토 ····· 55
2.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유형별 검토 ····· 63
3. 현황분석의 시사점 ····· 67
제4절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 69
1.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 69
2.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시사점 ····· 73
제5절 지역균형뉴딜의 함의 ····· 74
1. 추진 현황에서 나타난 이슈 ····· 74
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방향 탐색 ····· 74
3.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함의 ····· 77

제4장 지역균형뉴딜 2.0 추진 전략

제1절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체계 ····· 82
1.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방향 ····· 83
2. 지역 중심 뉴딜사업 추진 유형 전환 ····· 85
3. 초광역기반의 지자체 간 협력 균형성장 ····· 85
제2절 지역 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강화 ····· 87
1. 다주체(지자체 · 주민 · 혁신기관) 참여 지역주도 뉴딜 추진 ····· 87
2. 지역 체감형 사업 강화 및 상향식(Bottom-up) 사업 발굴 ····· 88

제5장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 94
2. 제안의 요약 ····· 95

참고문헌 ····· 98

[표 목 차]

<표 2-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 내용 요약 ····· 20

<표 2-2> 한국판 뉴딜 1.0과 한국판 뉴딜 2.0 ····· 21

<표 2-3> 공공기관 선도사업 추진 예시 ····· 29

<표 3-1>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관련 4대 주민체감 분야 8개 과제 ····· 37

<표 3-2> 지역균형뉴딜 부처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42

<표 3-3>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신청 접수 현황(2021.6) ····· 47

<표 3-4>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권역별 선정 현황 ····· 48

<표 3-5>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결과 ····· 50

<표 3-6> 지역균형뉴딜 사업 현황 ····· 55

<표 3-7> 자자체별 지역균형뉴딜 사업 대표적 내용(서울) ····· 57

<표 3-8> 지역균형뉴딜 중점 추진 사업 예시 ····· 60

<표 3-9>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 63

<표 3-10> 지역균형뉴딜 사업 유형별 현황 ····· 64

<표 4-1> 주민 체감 강화한 지역균형뉴딜 영역(안) ····· 88

<표 4-2> 자치단체 주도 지역균형사업 구성 메뉴(안) ····· 89

[그 림 목 차]

<그림 1-1> 중앙일간지 신문기사 지역균형뉴딜 단어 빈도수 ····· 2

<그림 2-1>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 10

<그림 2-2> 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 및 GRDP 격차 ····· 23

<그림 2-3> 지역균형뉴딜 개념도 ····· 24

<그림 2-4> 지역균형뉴딜 정책목표와 방향 ····· 25

<그림 3-1> 지역균형뉴딜의 유형 ····· 32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향 ····· 36

<그림 3-3>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신청 절차 ····· 38

<그림 3-4>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지원 대상 ····· 39

<그림 3-5>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신청 현황 ····· 48

<그림 3-6>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지역별 신청 및 선정 현황 ····· 49

<그림 3-7>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및 선정 분야 현황 ····· 53

<그림 3-8> 지역균형뉴딜 투자 현황과 사업 분야 ····· 56

<그림 3-9> 지역균형뉴딜 유형별 비율 및 투자 비율 ····· 66

<그림 3-10> 곡성군 상상더하기 미디어아트여행플랫폼 리빙랩 운영 체계 ····· 71

<그림 4-1>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주도권 전환 예시 ····· 83

<그림 4-2>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 추진 절차(안) ····· 84

<그림 4-3> 지역 주도 균형뉴딜 추진 체계(안) ·····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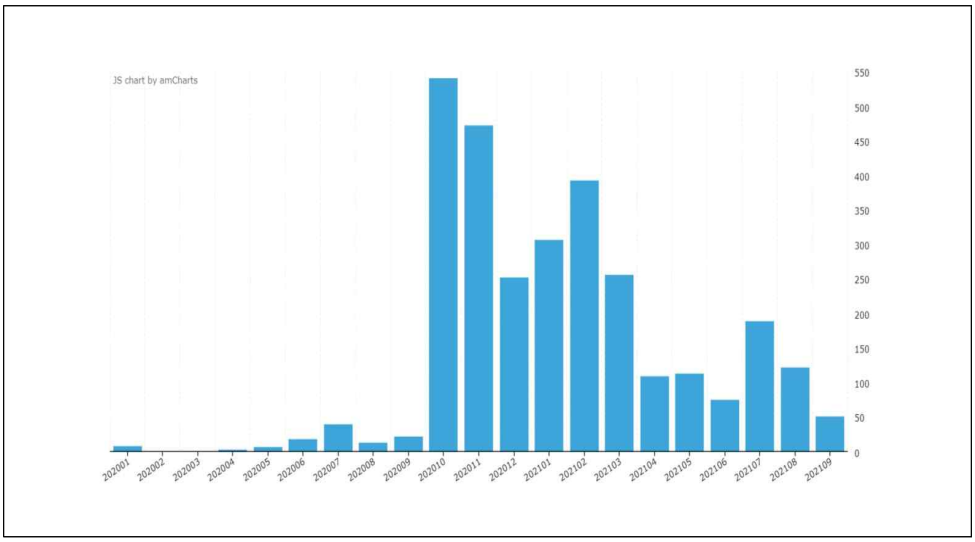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추진 배경

○ 2021년 10월 13일 ‘지역균형뉴딜’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목적에 정합한 과제발굴과 주민의 체감 정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1](디지털, 그린, 휴먼)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단순한 SOC 혹은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
- 또한, 빅데이터 키워드(신문기사) 빈도분석 결과, 지역 균형 뉴딜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중앙일간지 신문기사 지역균형뉴딜 단어 빈도수

○ 하지만, 지역주도의 한국판 뉴딜인 지역균형뉴딜은 점차 지방정부와 주민 공동체 주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과제 유형의 재설정, 발굴 절차 등의 새로운 방식을 탐색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9월 2일 주민공동체 주도의 사업 발굴 등을 위해 국정과제위위원

1) 디지털경제 구현과 저탄소경제(탄소제로)로의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기반 조성을 포함하고 있음

회・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출범

-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지역 역량에 맞는 지방정부・주민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과제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뉴딜의 목적과 주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의 발굴 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지역균형뉴딜이 초광역협력 등 균형발전정책[2]과의 연계성 강화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지역 기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 지원을 강화할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주도하는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기획 노하우 전수 등 발굴역량의 강화 등 필요
- 지자체-주민-지역혁신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과제 발굴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기본 체계의 탐색이 필요

□ **목적**

○ 기 지역균형뉴딜로 제안된 과제들의 유형을 중심으로 주민 체감 과제의 현황을 확인하고, 한국판 뉴딜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과제 발굴을 위한 유형의 재설정

○ 지역균형뉴딜이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 중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과제의 유형 제시 및 발굴 절차 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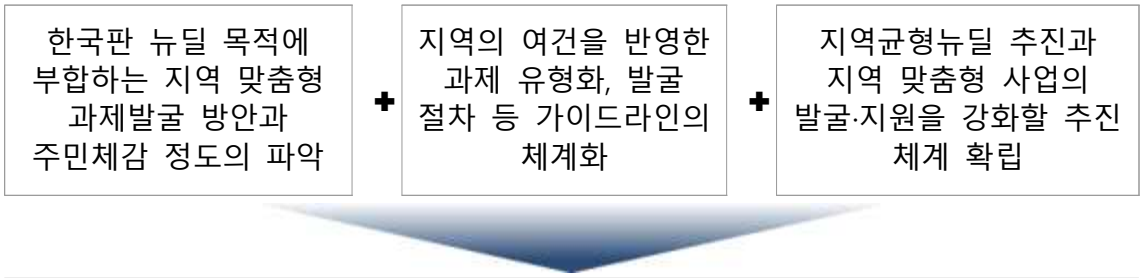
○ 글로벌 선도국가의 지역 기반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균형뉴딜 과제 방안 제시

○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뉴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사업의 발굴・지원 강화 추진 체계 제안

2) 혁신도시・도심융합・기업도시(국토공간), 국가혁신융복합클러스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산업), 지자체-지역대학-산업연계 지역혁신 등(사람).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추진 내용**



□ **추진 범위**

○ 지역균형뉴딜 개념의 제시 및 사업 추진 현황 등 분석 및 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역균형뉴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현황 중심의 문제점 분석

○ 지자체와 주민 중심의 사업 유형 제시 및 과제 발굴 체계 마련

-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사회적 합의(Deal)에 기반한 지역균형뉴딜이 추진되도록 지역협력체계 강화 방안 제시
-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기관 등 지역조직을 통해 지역균형뉴딜 과제 기획 강화 방안 제시

○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 제안

□ **수행 방법**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등 문헌조사를 통한 지역균형뉴딜의 현황 파악

○ 지역 전문가 인터뷰(FGI) 및 자문을 통해 주민체감형 사업 발굴 방안 및 지역주도 방안 한국판 뉴딜에서의 지역사업의 지역적 적합성 검토 등

3. 기대효과

□ **한국판 뉴딜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추진**

○ 지역 맞춤형 과제발굴로 주민체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균형뉴딜 과제 마련 및 국가균형성장 추동

○ 지역균형뉴딜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 보완

□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지역 맞춤형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 기반 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사업의 발굴·지원을 강화할 추진 체계 확립**

제2장 한국판 뉴딜 & 지역균형뉴딜의 개념 정립

제1절 균형발전의 개념 및 추진방안

○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 수립과 실행의 결과 전 세계적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경제적 수준 차이가 심화됨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현상을 억제하고자 그간 정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실행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수립・실행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양여금 이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었으며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김우석・김유진, 2020; 조형석・양지숙, 2021). 그 결과 비수도권의 젊은층 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와 함께 많은 권역에서 높은 고령화율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성장보다 사회복지 쪽에 매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됨(김우석・김유진, 2020).

○ 이러한 원인으로는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예산이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김우석・김형진, 2020; 김홍주・강인호, 2017; 김홍주・박상철, 2017; 정창수 외, 2016; 조형석・양지숙, 2021; 황해동, 2020)

○ 본 장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과 그간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도출하고자 함

1. 균형발전 개념

○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불균형 또는 균형발전에 중점

을 두고 있어 연구의 대상에는 다소 간 차이가 존재함. 불균형에 관심을 두는 경우, 불균형을 치유의 대상으로 두고 그 수단을 균형발전정책으로 정의함. 반면,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둔 경우, 삶의 질 입장에서 기회가 균등한 상태, 지역의 잠재적 경쟁력이 보장된 상태를 강조함(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연구자별로 살펴보면 고병호(2020)는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함. 최진혁(2015)은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개발지표들이 서로 대응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함. Viteritti(1982)는 “지역주민의 필요와 그 충족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태로서 수요를 고려한 공공서비스의 수혜 가능성”으로 정의함 더불어 한국지방세연구원(2021)의 경우 균형발전은 현재 상태를 불균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균형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적 화두가 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족과 함께함.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으로 접근방법, 발전전략, 지방-수도권을 제시함. 즉, 개별적 접근에서 종합적 접근으로,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수도권 집중 억제에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 관리를 3대 원칙으로 제시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정부는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수도권 기능 분산 및 지역성장거점 조성 측면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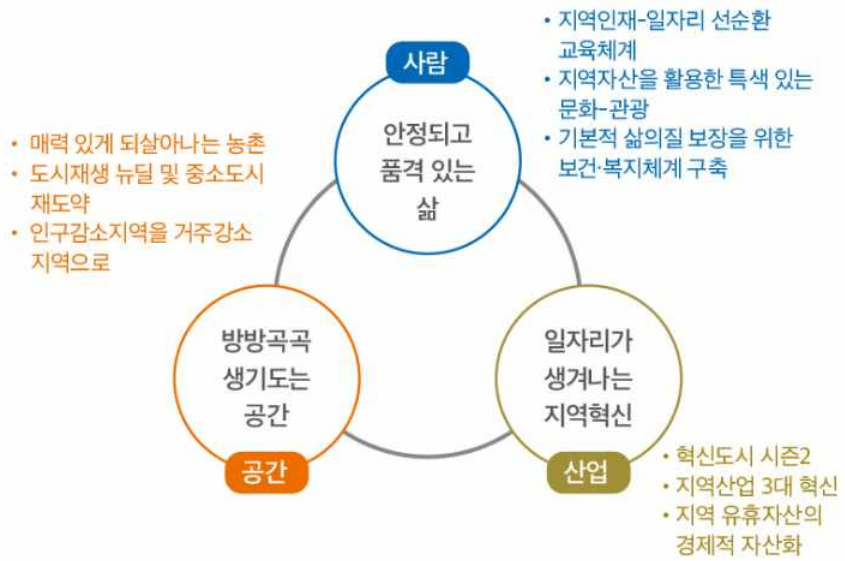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은 각 정부마다 다양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출범부터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를 제시

- 목 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전 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전 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전 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논산어촌

○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예산편성・배분・조정 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제출권을 강화함(진승호, 2021)

○ 이와 함께, 2018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삶, 공간, 산업부문 전략과 실천을 위한 9대 과제 제시



<그림 2-1>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 제도적 마련과 혁신도시 건설 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구축과 지역균형뉴딜을 들 수 있음

○ 앞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지역발전으로 한정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쟁력 강화로 규정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뿌리를 지역발전으로 보고 있음. 즉.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

쟁력 강화가 지속가능할 경우,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짐을 강조함(김우석・김형진, 2020)

○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역균형뉴딜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 중심의 사업 개발, 지역 맞춤형 뉴딜 사업의 발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야 하며 초광역적 뉴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역균형뉴딜**

○ 지역균형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중심축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과제 발굴이 중요함(진승호, 2021)

○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이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고 전폭적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각 지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산업들을 가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진승호, 2021)

○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 중 지역에서 시행되고 효과가 지역에서 발현되는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과 지자체가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유형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 발현 가능

- 광역 단위 산업・경제권 육성 및 기초생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뉴딜 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위기 해소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역이 지역균형뉴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새로운 산업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확보와 함께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음

○ 한국판뉴딜 사업비 중 47%가 지역균형 뉴딜에 투자

- 한국판뉴딜에 투자되는 160조 원 중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는 47%인 75.3조 원이며,
- 이 중, 지역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 국가관리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디지털뉴딜에 24.5조 원 투자

- 교육인프라 확충,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에 50.8조 원 투자

○ 지역 중심의 부분으로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추진

- 중앙정부 중심 투자와 함께 지자체는 자체재원 마련과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전략 수립, 뉴딜 전담부서 신설 및 사업 발굴 등을 추진
-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보유 자원,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 선도

□ 초광역협력[3)]

○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혁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

-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 문제,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약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력이 전체 대비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 초광역 경제·생활권의 형성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됨

- 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2%, 청년층의 56.2%가 수도권에 거주
- 수도권은 압축된 대도시가 갖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과 혁신 인재들을 흡수하는 강한 힘을 갖게됨에 따라 수도권 고밀도 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됨

○ 지역의 계속되는 위기감 속 메가시티라는 초광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능별 유연한 권역 형성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공동문제 해결, 융복합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집적의 이익 실현이 필요함

3)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보도자료(2021.10.14.)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장 신설('21.1.12 공포, '22.1.13 시행)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法人)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비해 자치권 보장하게 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 협의와 규약의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안부장관의 승은을 통해 구성되고,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을 통해 운영 재원을 마련하게 되어 있음

(관계부처 합동, 2021)

○ ’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시행으로 두 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됨

○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의 마련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강민규, 2021)

- 지역 주도의 광역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협력사업 기획 과정에서 주민, 민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참여 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결집 시킬 수 있어야 함
- 사업 목적에 따른 유연한 협력권역의 설정 필요
- 실질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광역협력 단위에서 합의·공유된 비전과 전략 마련 필요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지역균형뉴딜의 초광역적 뉴딜사업의 추진 필요(윤태범, 2020)

- 자치단체에서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수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지속가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광역적으로 추진되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개별 차지단체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뉴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

○ 혁신도시별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거점화 필요

- 혁신도시별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공공, 지역사회, 주민과 지자체가 협업 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혁신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2. 균형발전 재원과 특징

○ 지방자치가 착근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이며 지방분권의

핵심요건은 재정분권임(임동완 외, 2020).

○ 재정분권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결정을 자립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논의됨(임동완 외, 2020)

○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운영을 추진함(원광희・박상원, 2011; 정정화, 2017; 황해동, 2019). 이는 바로 재정권 보장을 통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임(금재덕 외, 2012; 문병효, 2008)

○ 그러나 지자체의 자주재원보다 지방교부세의 재도개편을 통한 일반재원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고보조금과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존하고 있으며, 자율성 기반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규모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다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징 및 포괄보조금의 목적・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의 궁극적 목적 달성과 효율적 지역균형 뉴딜 달성을 위한 연계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 개요 및 특징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참여정부 이후 역대 정부 출범 시, 각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회계의 명칭 및 계정 등이 지속 개편됨(김홍환, 2021a). 명칭의 변화 및 계정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법률 목적의 큰 변화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존재함(조형석・양지숙, 2021)

- 정권별 계획체계와 회계명칭의 경우,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명박정부에서는 지역발전계획・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발전계획·지역발전특별회계,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변경·개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되어오던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특징을 지님(이석희 외, 2008)

○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역혁신과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조형석・양지숙, 2021).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정. 참여정부에서 국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정에서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적 성격을 가지게 됨(김홍환, 2021b)

○ 이명박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도입. 2009년 4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적 성격의 근거를 마련함(김홍환, 2021a). 또한 광역발전을 목표로 함에 따라 지역혁신계정을 광역발전계정으로 전환. 이명박정부 이후 지역개발 계정은 통상 포괄보조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으로 광역발전계획은 부처 편성계정으로 운영

○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조형석・양지숙, 20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균형발전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설정(조형석・양지숙, 2021). 사람・공간・산업의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도의 자립성 성장기반 마련을 추구함(조형석・양지숙, 20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2018년 10월 2단계 재정분권 선언을 통해 지방소비세 확충과 함께 3.5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시행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은 2005년 5.5조 원에서 2009년 9.6조 원으로 급증 한 이후 2022년 10조 원 내외로 유지됨. 2008년까지 지역 자율편성사업 예산이 많았으나 부처 편성사업에 각종 SOC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편입되어

2009년부터 부처 편성사업의 예산이 많아짐. 반면 2018년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지역 자율편성사업의 예산이 많아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조 및 특징**

○ 국가균형특별회계는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구성되며 크게 지자체 자율편성과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분됨

-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포함되고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부처직접편성 방식의 지역지원계정에 포함됨

○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 별 편성체계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기획재정부, 2021)

-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함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부처 직접편성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 통해 선정
- 부처직접편성사업은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 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 편성

○ 각 지자체는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함

2) 포괄보조금의 목적 및 한계

□ **포괄보조금 개념 및 목적**

○ 포괄보조금 지원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과 정책집행의 포괄성 및 재원배분의 재량과 자율성을 주요 가치로 지향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핵심 목표 또는 기능별 사업군을 포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예산으로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하는 방식(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포괄보조금에 대한 국내 연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규환 외(2003) 연구는 보조금을 조건부보조금과 무조건부보조금으로 구분하고 포괄보조를 조건부보조금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인정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함
- 이와 유사하게 임성일(1994) 역시 사용 용도의 제한 정도에서 일반보조와 특정보조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보조금으로 정의
- 김홍환(2021a)의 연구에서는 사업유형을 묶음으로 제시하고 재원운용 및 평가에 있어 그 효과를 기준으로 포괄정산 방식을 채택하는 보조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의

○ 미국 정부관계위원회(ACIR,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mental Relations)는 포괄보조금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중 하나로 재정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운용에 재량을 가지고 포괄적 기능 영역에 사용될 수 있게 법적 공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으로 정의함

○ 포괄보조금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조기현,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GAO, 1995)

- 특별보조금 방식 대비 예산편성의 자율성,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측면에서 자율성 확대에 대한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수단 가능
-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가능
- 행정비용의 절감과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간섭과 관료주의 억제
- 사업조정 및 기획과정에서 유사 중복사업 예방, 조정 및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며 조정과정을 통해 부처별 연계・협력 촉진(정은희 외, 201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중앙재원의 지방 이전이라는 점에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음(김홍환, 2021a). 지방교부세의 경우 일반보조금의 형태를 띄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홍환, 2021a).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정보조금으로써 사업별로 배분되며 사업규모가 미리 정해지는 패쇄형 정률 보조임

○ 참여정부시절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정에서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적 성격을 가지게 됨. 포괄보조에 대해서는 재정분권의 한 방법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구균철, 2018)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집행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기제로 보는 시각(이재원, 2009)이 존재함

-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포괄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 이전 목적과 지역개발정책의 포괄성, 재원배분의 재량과 자율성을 지향하고자 했음(김성주 외, 2018)

□ 포괄보조금의 한계 및 개선방안[4)]

○ 부처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이 상이함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함.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종합하고 일괄적 지침의 제시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

○ 예측 가능한 사전 평가기준이 부족함에 따라 사업의 목표와 사업 내용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한계 존재. 따라서 일괄된 지원평가기준의 마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사업 준비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포괄보조금제도 본연의 자율성이 결여된 상황으로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와 계속비 예산의 이월 등에 있어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장점을 바탕으로 설계된 포괄보조금 방식인 것에 반해 사업 내용 변경 시, 매번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 균특사업 편성의 자율성이 떨어짐

○ 평가항목의 객관성이나 계량화가 낮고 성과평가 후 인센티브의 규모 미흡함

- 지자체 사전 평가를 위해 시·도, 시·군·구 별 자체평가 시 사용될 성과지표를 선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만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 구축 가능

4) 본 포괄보조금의 한계 및 개선방안 부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를 기반으로 작성

제2절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 COVID 19 이후 4차 산업혁명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디지털 정책과 환경 회복이라는 양자를 함께 지향하는 흐름으로 전환 중임

○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 하에 2020년 7월 17일 한국판 뉴딜 정책(디지털과 그린뉴딜)을 발표한 바 있음

- 한국판 뉴딜의 기본 배경은 콘드라티에프 주기 모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기술혁신과 경제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최근까지 5번의 주기적인 변동을 담고 있음(기정훈・조덕호, 2020)

○ 한국판 뉴딜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래 사회를 위한 구체적 비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코로나 19로 인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생활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는 사회구조의 대전환, 노동시장 재편 및 양극화 해결과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한국판 뉴딜 역시 우리 미래 사회의 변화를 디지털 중심사회, 탄소중립사회,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 틀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공동체를 유지하며 선진 사회로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뉴딜을 발표함

-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뉴딜 양자는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적 하에 COVID 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이외에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개념 및 목적과 함께 지역균형뉴딜의 도입 취지 및 한국판 뉴딜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함

1. 한국판 뉴딜

○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개념

- 국비 114.1조원과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의 총 160조 원의 재원을 기반으로 함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2개 축을 기반으로 하며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하여 디지털 인재, 그린인재 양성 등을 추진

- 디지털뉴딜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의 디지털화 등을 포함하며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녹색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

○ 한국판 뉴딜을 위하여 정부는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시행 및 시행 예정

○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 산업 육성의 방향을 혁신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표 2-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 내용 요약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58.2조 원 투자 일자리 90만 3천 개	73.4조 원 투자 일자리 60만 9천 개	28.4조 원 투자 일자리 33만 9천 개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출처: 황지나,이준우(2021)

○ 특히 한국판 뉴딜[5]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2개 축을 기반으로 하며 그

후 안전망 강화를 포함

○ 한편, 한국판 뉴딜 1.0과 한국판 뉴딜 2.0은 거의 동일하면서도 약간의 차이점을 가짐

- 한국판 뉴딜 1,0은 2020년 7월 발표된 정책으로 그로부터 1년 후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었음
- 즉, 기존의 디지털, 그린,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휴먼뉴딜을 중심으로 변모함.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람에 대한 투자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남

<표 2-2> 한국판 뉴딜 1.0과 한국판 뉴딜 2.0

한국판 뉴딜 1.0	한국판 뉴딜 2.0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중심	사람에 대한 투자, 청년정책,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재구성 -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보호, 청년층 생활 안정 지원, 불평등 해소
디지털과 그린 뉴딜 중심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계획 포함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

○ 휴먼뉴딜이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은 문재인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인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 추진의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 가치 및 내용은 지역균형뉴딜에도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국가균형발전의 큰 줄기로써의 방향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제도적, 현실적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지역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책적 수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균형뉴딜의 중요성이 부각됨
- 대부분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지역적인 확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지역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균형뉴딜이 필요함

5) 이는 한국판 뉴딜 1.0을 의미함

- 한국판 뉴딜 추진 투자계획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체의 약 47%에 해당하는 약 753조 원이 지역사업을 차지함
- 한편 창의적인 사업의 개발 및 혁신 산업에의 투자,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대대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발굴 및 확산의 중요성이 가시화됨

○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곧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이 견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이어져 온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근거한 혁신도시 사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에서 나아가 균형발전 뉴딜을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미래 지향적으로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촘촘히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임

2. 지역균형뉴딜

1) 배경

○ 지역균형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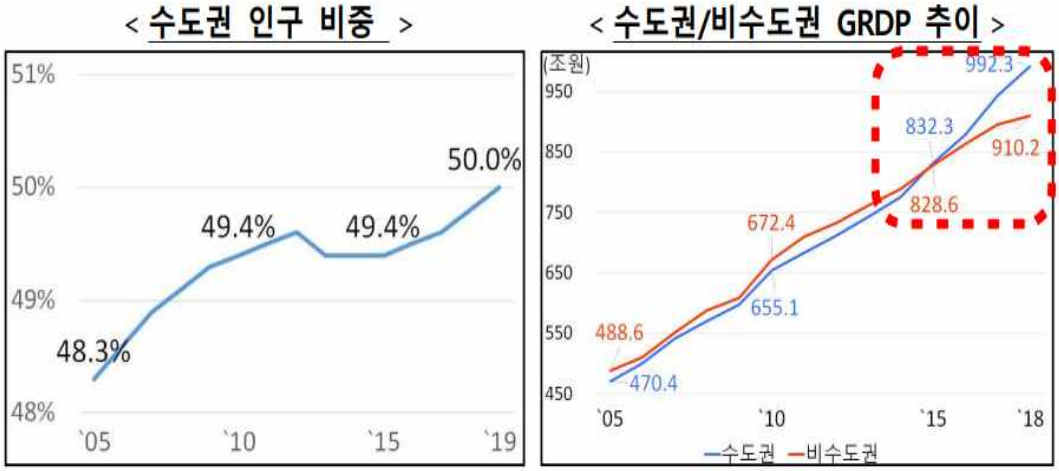
○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경제 활성화를 함께 논의하여야 할 사항임

- 경기침체 극복,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차원의 뉴딜 필요
- 주민의 성과체감, 지속가능 뉴딜 추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뉴딜사업 발굴 필요

○ 나아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이 그 사업의 효과성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지역균형뉴딜 사업 선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더불어,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의 연계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가속화 필요하고 한국판 뉴딜의 사업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 필요

- 수도권 인구 증가, 비수도권과의 지역내총생산 격차 확대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적극 추진이 필요



출처 :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2020)

<그림 2-2> 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 및 GRDP 격차

○ 종합하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은 한국판 뉴딜과 더불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균형뉴딜이 각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도 주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함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뉴딜을 만들어 내는 주역

(2021년 7월 21일 모두 발언)

2) 지역균형뉴딜의 개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

로 규정

- 즉, 법에 근거하여 지역균형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발전 분야'의 의미를 명확히 하게 됨

<그림 2-3> 지역균형뉴딜 개념도

○ 관련 법에 의하면 1) 디지털 경제, 2) 저탄소 친환경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발전 및 혁신을 도모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여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음

3) 지역균형뉴딜의 중요성과 종류

○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지역균형뉴딜은 미래지향적 선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임

○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지자체 재원, 민간 주도,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업 등 유형을 바탕으로 1)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2)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3)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됨

○ 정책목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균형발전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혁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가균형발전의 세 가지로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 균형발전 정책의 연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중점 방향으로 함

<그림 2-4> 지역균형뉴딜 정책목표와 방향

□ 중앙정부 추진 한국판 뉴딜 지원사업

○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은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 원 중 47%를 차지함(75조 3천억 원).

-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지능형 재해관리시스

템,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첨단 도로교통체계 (중앙과 지방 매칭 프로그램)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이 이에 해당 됨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중앙단위 거시적 사업의 지리적 범위가 지역에 머무는 사업들이 이에 해당하고 지역 발전에 가점을 주어 사업 선정

○ 디지털 뉴딜은 58.2조 원 중 24.5조 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콘텐츠 고도화, 지역 상권 활력 제고, 지역 의료여건 개선, 국가관리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함

- 문화서비스, 의료, 비대면 지원, 스마트 솔루션 등 기반 사업 지원 등이 주된 사업 영역

○ 그린 뉴딜은 그린스마트스쿨 등의 그린 교육인프라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보급 지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등이 포함

- 그린 뉴딜은 기후 환경과 관련한 건축, 교육, 산업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둠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가속화 추진(서울), 로봇화 공장 롤모델 구축(대구), 전남 신안의 해상풍력단지, 강원도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 사업임

○ 각 지자체는 뉴딜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광역 및 기초 총 136개 지자체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 중임

○ 디지털 뉴딜 중심 사업은 주로 지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역별 특성이 딱히 드러나지 않고 각 지역이 선점하는 방식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벤처 창업 지원, 기업 지원, 연구 지원 등의 기초적인 시작 단계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그린 뉴딜은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의 지역적 시행,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지역에서 자체적인 역량에 맞게 시행하는 사업들로 디지털 뉴딜과 결합하거나 그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시행

○ 그 외에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주민 힐링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현 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시도들이 진행 중

○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그린 영역, 디지털 영역에 적합하게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다는 점에서 '주민주도형 사업'을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임

○ 현재까지 사업들은 주로 미래 산업 발전을 염두에 둔 산업 및 일자리 파급 효과를 가져오거나 미래 에너지 및 기후 환경에 적합한 도시 환경 생태계 구축이 주된 영역인 것으로 보임

○ 결국 이러한 약점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 영역, 건강 의료 영역을 산업과 연계시키거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스스로 찾아서 지역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확대 및 육성되어야 그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인 중앙정부 사업의 지역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사업을 자체 발굴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 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경제 자유구역별로 핵심 전략산업 선정, 재정 지원 제공,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및 지방채 초과 발행 지원, 지역산업활력 펀드와 지방기업 펀드 조성 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상 인센티브 제공의 혜택이 주어짐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등이 대표적 사업임

○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로는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디지털 및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업

○ 공공기관 주도 그린 뉴딜로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린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는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 태양광 에너지 개발과 한전에서 주관하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들 수 있음
- 에너지 및 환경 사업을 통하여 미래의 산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임

○ 그 외에도 디지털 및 스마트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활밀착형 복지'의 특성을 지니기도 함

○ 또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은 지역의 특징을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을 강화, 확산하는 기능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음

○ 나아가 혁신도시별 지자체의 협업과제를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기업과 대학,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여 혁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혁신도시의 10대 협업과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부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 조성(울산),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 기업이전,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전북), 에너지밸리 조성(광주, 전남), 실버 의료기기 메가시티 조성(강원),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충북),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제주)
- 각 협업 과제는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나 향후 지역 대학과의 연계, 주민들의 참여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공공기관 주도 지역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하여 창업 및 산업 저변 확대, 신기술 활용 교육, 환경 중심의 산업 재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3> 공공기관 선도사업 추진 예시

기관	사업
한국전력공사 등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중부발전	풍력발전 활용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한국서부발전	주민참여형 대용량 수상태양광 에너지 개발
한국전력공사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국가스공사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택토리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
국립암센터	비대면 및 VR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고도화
한국예탁결제원	민관공 협업 기반 창업공간 및 성장프로그램 제공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개방 공유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공유지 개발을 통한 제로에너지 선도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3. 지역균형뉴딜의 지향

○ 한국판 뉴딜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균형뉴딜의 균형발전의 철학 위에 정체성과 독자성이 모호한 채로 초창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추동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 효과를 전국민이 향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

○ 지금의 지역균형뉴딜의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거 어느 정책에서보다 구체적인 실행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 정의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뉴딜의 정착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과제의 선정이 필요

○ 더불어, 해당 지역의 기업과 혁신자원들의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과제의 발굴과 추진·운영의 묘가 필요 할 것임.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과제 선정에 있어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제3장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제1절 지역균형뉴딜 정책 과정

1. 지역균형뉴딜

□ 정책목표

○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경제 혁신, 삶의 질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 지역경제 혁신 : 선도형 지역경제로 발전하도록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경제 혁신
- 삶의 질 개선 : 주민 체감형 뉴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 국가균형발전 도모 :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가속화를 추동

□ 지역균형뉴딜의 배경과 유형

○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중요성 대두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발표(’20.10.13)

< 지역균형뉴딜 3가지 유형 >

❶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①유형) : 한국판 뉴딜(총 160조) 중 지역관련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75조)으로 국비+지방비+민자로 추진

❷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②유형) :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과 연계하여 지자체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 민자로 추진

❸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③유형) : 공공기관이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

<그림 3-1> 지역균형뉴딜의 유형

□ **지역균형뉴딜의 정의와 대상**

○ “지역균형뉴딜”이란 디지털 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6)]

○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및 지역주도의 성과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광역시도를 포함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함

○ 행안부가 신청 사업의 적합성을 검토 후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균형위가 심의 · 의결

- 심의 · 의결의 과정을 거치고 중앙부처로 결과를 통보하여 예산 협의하게 됨 이에 따라 실제 행안부와 균형위는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는 예산의 부분에서 제한적 역할에 머물게 됨

□ **추진방향**

○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연계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뉴딜사업 발굴

- 한국판 뉴딜+지역정책 : 한국판 뉴딜과 기존 균형발전, 지역경제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뉴딜 사업 발굴 : 지역 간 경쟁, 협업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지역균형뉴딜 사업 발굴
-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기업 입주시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 혜택 확대

○ 지역산업 뉴딜 재편 지원

- 주력산업 지원 : 14개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신제품 개발 촉진, 시제품 제작 등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
- 산업인프라 구축 : 지역산업 인프라 지원사업을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와 연계하여 장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투자 활성화: 디지털・그린 분야 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강화

6) 지역균형뉴딜 지역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자료(2021.11)

□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 지자체 : 투자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 등 절차 간소화
- 지방공기업 : 광역 500억 원 이상, 기초 지방공사 3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 면제 또는 신속 지원

○ 지방채 초과발행 및 지방교부세 지원

-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요건 충족의 경우, 지방채 초과발행을 협의하여 재원 조달 지원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활용, 뉴딜 사업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제공

○ 뉴딜·지역관련 펀드 투자 및 균등회계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초광역 협업 등의 선도사례를 선발하여 우수 선발 지자체에 균특회계 차등지원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추진

- 기관 역량, 지역특색 고려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
- 디지털·스마트화 : 주요 산업 및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추진 실시
- 신산업 기반마련 :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차, 비대면 진료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지역기업 지원 : 공공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창업기업에는 성장자금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그린 뉴딜 투자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혁신도시 지역균형뉴딜 거점화

- 혁신도시별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주민,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인프라 조성, 지역기업 지원,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 생태계 조성**

○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뉴딜 사업 진행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 및 집행실적 관리

○ 지역규제 혁파

- 산업·입지규제 등 지자체 애로사항 적극 개선을 위해 입법·지침개정 추진

○ 지자체 조직·인력 지원

-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권고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컨트롤타워 기능 보완
-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한 지방인력 수요를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반영

2.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배경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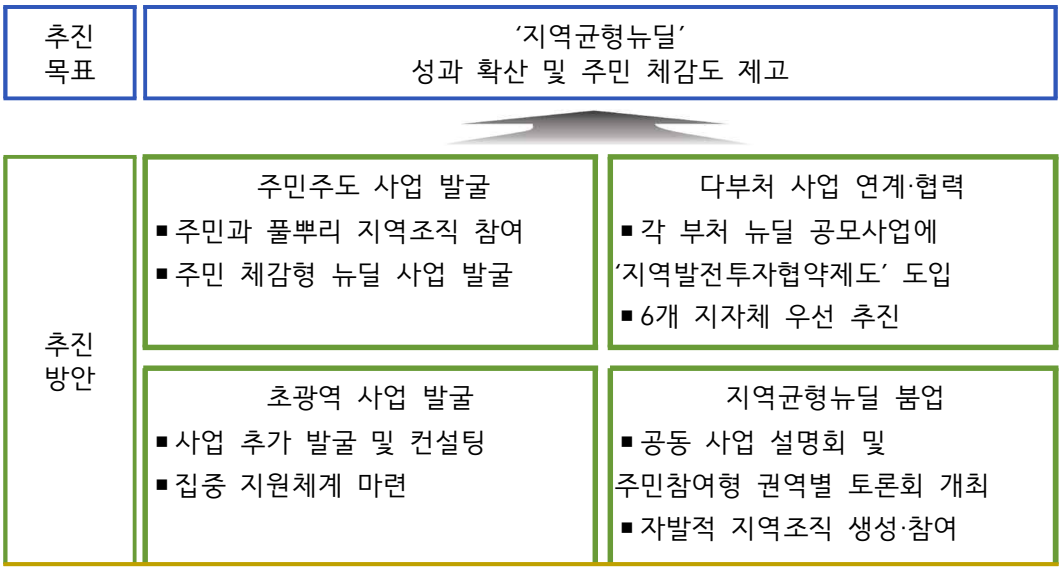
○ 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해 추진된 지역균형뉴딜의 추진과 함께 추진된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은 정책의 대상이었던 주민이 ‘주인’으로서 한국판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내생적 요인에 바탕을 둔 지역균형뉴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사업 수행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 특히, 기존 뉴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 국가 중심의 기획 그리고 개별부처 중심의 분절적 추진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 사업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에 한계가 존재했으며,

○ 더불어 개별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 관주도의 뉴딜계획으로 인해 초광역 사업 및 다부처 사업 발굴에 한계

- 한국판 뉴딜의 경우 대부분 각 중앙 중심의 공모방식으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해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 발생



출처 : 지역균형뉴딜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2021.11) 자료 수정

〈그림 3-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향

○ 이에, 지역균형뉴딜의 방향을 전환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자리하고 있던 중심축을 주민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국민의 체감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한 붐업으로 실제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였음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대상

○ 디지털·그린 뉴딜과 정합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활 편의성 개선, 공공서비스 확충, 지역문제 해결 등 주민 체감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지원 규모는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여 광역은 최대 5억 원 이내, 기초는 3억 원 이내로 총 100억 원이었으며, 심사의 결과와 지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

동 및 조정

<표 3-1>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관련 4대 주민체감 분야 8개 과제

주민체감 분야	대표 과제
❶ 혁신적 도시 개조	▪ 에너지 자립 도시
	▪ 스마트 시티
❷ 최적화된 사회적 서비스	▪ 디지털 공공서비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AI, IoT 활용 돌봄사업
❸ 맞춤형 주민여가·청정 생활환경	▪ 스마트 그린 박물관·미술관·도서관
	▪ 주거환경 개선
❹ 깨끗하고 똑똑한 산업환경	▪ 스마트 공장 및 농·어장 구축

출처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 자료(2021.8) 수정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특징

○ 그 간 추진되었던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과 달리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경우 주민이 기획과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뉴딜의 중인으로서 주민을 중심에 둠

○ 추진상에 나타난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기획·발굴, 사업 집행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풀뿌리 주민조직[7]이 참여
- 지역 주민의 수요·요구에 기반 한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사업공모, 주민 자치회·반상회 등 주민조직 관련 회의체 안건 반영 등을 추진

○ 특히, 본 사업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숙의의 과정과 지역의 협의체 구성[8] 등 주민 참여 기반의 과제 도출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9]

7) 지역문제해결플랫폼·주민자치회·마을기업(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재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활기업(복지부), 주민협의체(국토부), 마을교육·평생교육 공동체(교육부), 에너지공동체(산업부), 산림일자리발전소그루경영체·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산림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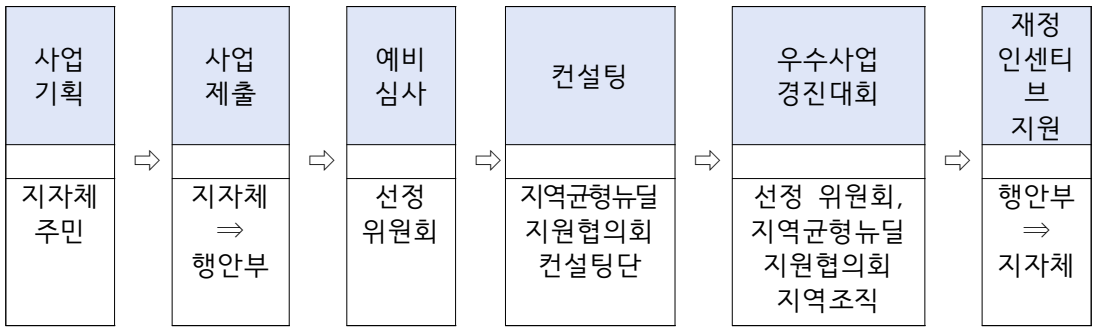
8) 주민참여 프로젝트팀(도시재생), 추진위원회(농산어촌 개발), 주민협의체(어촌뉴딜), 주민자치회(행안부) 등 다양한 지역협의체 육성·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협의체 구성) ①사업 주제별 참여 모집(시군구 단위) 또는 ②일정 지역 중심의 참여 모집(소생활권 중심)
- (조사단계) 사업 주제에 대한 기본 의견 조사, 워크샵,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 수렴, 사업 주제 분야 전문가 지원을 통한 주민 의견 구체화, 고도화
- (기획단계) 협의체 구성원 일부가 '민관 합동 기획팀'을 구성(주민, 행정, 전문가로 6~8명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 작성 과정 중간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협의체 공유 및 논의 진행
- (시작단계) 사업별 진행 퍼실리테이터를 선임하여, 협의체와 소통 역할 및 실질적 사업 관리 (주민-퍼실리테이터-행정)
- (운영단계) 협의체 구성원 일부가 '민관 합동 운영위원회'로 참여하여, 사업 운영, 사업 구성, 진행 계획, 관리 방안 등 의견 제시

□ **추진 절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작성한 계획은 행안부로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

○ 그 과정을 보면 사업기획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주민들이 참여하게 끔 되어 있으며, 선정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우선 거친 과제에 한해 과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컨설팅을 거치고,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



출처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 자료(2021.8) 수정

<그림 3-3>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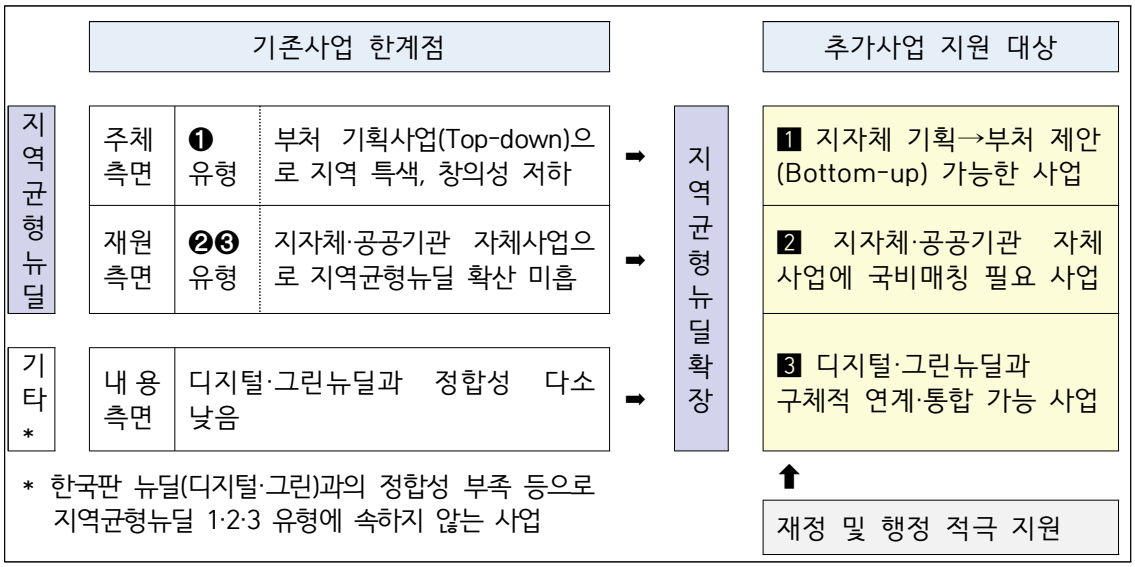
9)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 자료(2021.8)

제2절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1.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10)]

○ 한국판 뉴딜의 경우 지역이 주도해 발굴 제출한 1,178개 창의적 뉴딜 사업은 약 59%에 달하지만, 이중 사업 주관부처의 예산 등 추진 확정 비율은 1/3수준임

○ 이에,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지역 중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발굴에 착수하게 되고, 이 시기 본격적인 지역균형뉴딜이 시작됨



출처 :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추진현황 자료(2021.7)

<그림 3-4>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지원 대상

1) 추진경위

○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20.7.21) : 한국판 뉴딜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판 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로 여기서 지자체가 한

10) 2021년 7월 기준

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 내는 주역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역별 지역균형뉴딜 포럼 개최

- 대경권(10.15.), 동남권(10.20.), 충청권(10.28.), 호남권(10.29.), 제주권(11.4.), 강원권(11.18.), 수도권(11.24.)

○ 지역균형뉴딜 분과 신설('20.10.29)

- 17개 시도 자체 뉴딜 추진단 구성·전담부서 지정('20.10~11월)
- 행안부에 「지역균형뉴딜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자체 지원('20.12.30)

○ 행안부, 「'21년 지역균형뉴딜 세부지원방안」 발표('21.1.25)

○ 「'22년 지역균형뉴딜 시·도 국비지원사업」 접수('21.2, 행안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 균형위, 시·군·구 대상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5.10), 온라인 설명회(5.14), 권역별 기초지자체 현장 컨설팅(5.20~6.2), 신청 접수(6.8), 선정위 심사 및 부처협의, 본회의 의결(7.7),

2) 추진성과

□ **한국판 뉴딜에서의 지역사업 신속 실행 지원**

[주요 투자]

○ ('22년 국비요청사업) 지자체가 발굴해 제출한 1,178개 창의적 뉴딜 사업에 대해 사업 구체화 및 부처검토

- 각 부처 검토 결과 수용 256개, 일부수용 472개로 대상 사업 대비 수용률 58.7%

○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주력산업(48개)에 대한 '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확정(지역경제위원회, '20.12)

○ (도심융합특구) 산·학·연·관의 융합 혁신공간 플랫폼 구성을 위한 선도 후보지 선정(대구, 광주, 대전)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발의(5월)

○ (디지털-지역뉴딜 연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도의 R&D 환경 구축 지원*(5월),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지역의 생활안전 및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실증**(5월)

* (SOS랩) 인천(아동안전), 대전(시민생활), 부산(해양) 등 8개 지역

** (생활안전 분야) 인천, 순천, 안양, 여수 4개 지역, (제조산업 혁신 분야) 충주 양산, 창원 지역 3개 기업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뉴딜 분야 지방 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 우대, 1 · 2분기 보조금 지급(39개 기업, 1,388억 원)

[제도 개선]

○ (규제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 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메뉴판식 규제특례 추가 발굴 · 지역특구법 반영(계속)

-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7월) 및 사업화 지원 등

○ (경제자유구역)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평가계획 마련(3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6월 공포) 등 추진

○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코로나 19 이후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산업 56개 확정('20.12월), 27개 과제 선정 완료('21.4.29)

○ (균형발전 가점) 지역균형뉴딜 사업(문체부·중기부, 3건) 선정시 가점제를 통해 지역선정에 균형발전지표 활용(지표 활용 확대 및 후보사업 검토 부처협의 진행)

○ 그 외 투자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된 확산 지원의 경우는 행·재정적 개선을 통한 자치단체의 추진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제공,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펀드·투자 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 지역균형뉴딜 부처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2021년 정부예산 7.9조원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이 3조원, 그린뉴딜이 4.8조원

○ 지역균형뉴딜 2022년 예산의 경우는 13.1조원 확보

- 행안부 발굴 및 소관부처 검토 후 14.9조원 규모의 예산요구 후 13.1조원 확정

〈표 3-2〉 지역균형뉴딜 부처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부처	사업명	'21년 예산(억원)
□ 디지털 뉴딜		
과기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40
과기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549
과기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96
과기부	IoT・AI 기반 신데이터 댐 구축 (지하공동구 스마트관리)	71
교육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 사업 운영	128
교육부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대학 원격 교육지원센터 운영)	180
교육부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미래교육센터)	79
교육부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클라우드 전환 지원)	67
교육부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 사업(전산망 고도화)	69
국토부	자율자동차 상용화(테스트베드 고도화)	186
국토부	지하시설물 전산화	335
국토부	첨단도로교통체계	5,179
국토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터널원격제어체계구축)	406
국토부	도로유지보수(비탈면 IoT 시스템 설치)	180
국토부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교량 IoT 시스템 설치)	84
국토부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고속철도 스마트 SOC)	792
국토부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일반철도 스마트 SOC)	1,890
국토부	스마트공항구축(생체인식시스템 구축)	68
국토부	국가하천유지보수 (국가하천모니터링체계구축)	300
국토부	국가하천유지보수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	1,800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 (스마트시티 챌린지)	834
국토부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5
국토부	스마트시티확산사업 (국가시범도시 구축지원사업)	1,022
국토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
국토부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디지털물류시범도시조성)	20
국토부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 (디지털물류서비스실증)	40
국토부	물류시설스마트재생및공동화지원 (노후 물류기지 스마트 재생)	3
농식품부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	43
농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재해예방계측기 설치)	190
농식품부	농촌용수관리(농촌용수관리자동화)	346
문체부	스마트관광 활성화(관광 빅데이터 구축)	102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온라인서비스 기반 구축)	30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사립박물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10
문체부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온라인실감형 K-pop 공연 지원)	265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67

부처	사업명	'21년 예산(억원)
문체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84
문체부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50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100
문체부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실감형 스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100
문체부	국내관광 역량 강화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12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디지털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13
문체부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23
문화재청	국유문화재관리(국유재산 문화재 3차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천연기념물·명승 디지털 콘텐츠 구축)	9
문화재청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온라인 궁궐활용 콘텐츠 제작)	9
문화재청	무형유산원운영(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운영)	11
문화재청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수중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10
문화재청	조선왕릉보존관리(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개발)	14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대표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 보급)	40
문화재청	문화유산 활용 진흥(세계문화유산 방문코스 실감 콘텐츠 개발)	6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4차산업혁명과 디지털문화유산 기술개발)	2
문화재청	문화재예방관리강화(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10
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80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운영지원)	500
복지부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30
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례관리 IoT・AI 활용 건강관리 고도화 시범사업)	95
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장애인거주시설 IoT, AI 활용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돌봄 시범사업)	23
복지부	양로시설 운영지원(양로시설 IoT, AI 활용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 돌봄 시범)	4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66
복지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28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지능형 산림재해관리)	46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물류자원공유플랫폼)	100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통합관제센터)	185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81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100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135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혁신데이터센터)	34
중기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4,183
중기부	기술보증기금출연(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320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제조현장스마트화)	6,000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	726
중기부	소상공인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33
중기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20
중기부	소공인특화지원(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294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173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청정어장재생)	53
해수부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항만디지털 플랫폼 구축)	5

부처	사업명	'21년 예산(억원)
해수부	국가어항관리(스마트어항유지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	4
해수부	물류기업유치지원(스마트 공동물류 센터 건립지원)	36
행안부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구축)	288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50
행안부	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 시스템구축 (풍수해자동대응시스템구축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알림))	113
행안부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74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출연 (미생물 가상현실(VR) 체험관 조성사업)	6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국립공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8
환경부	댐유지관리(스마트댐 안전관리)	150
환경부	댐유지관리(댐유지관리 디지털화)	34
환경부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지원(유해 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61
□ 그린 뉴딜		
교육부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179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그린스마트 스쿨(재정))	943
국토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45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76
국토부	수소도시지원	245
국토부	수소물류시스템구축	80
국토부	수소충전소 구축	163
국토부	새만금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
농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	1,103
농식품부	농촌용수관리 (담수호 수질 개선)	14
농식품부	농촌용수관리 (수질자동측정망)	155
농식품부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200
농식품부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122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일반형 국민 체육센터(친환경 재구조화))	356
복지부	어린이집 확충(국공립신축)	201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36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자녀안심 그린숲)	50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생활밀착형숲조성관리)	150
산림청	정원 조성관리(정원인프라확충)	1
산업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976
산업부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60
산업부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사업	183
산업부	농어촌전기공급사업(도서지역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392
산업부	전선로 지중화 지원	200
산업부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143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	65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건물지원)	785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융복합지원)	1,577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지역지원)	100

부처	사업명	'21년 예산(억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후관리)	7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원스톱서비스지원)	14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생산 및 시설자금)	3,51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산단지원)	1,500
산업부	녹색혁신금융(융자)(녹색보증 지원)	50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운전자금)	30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에너지신산업)	100
산업부	수소연료전지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 개발사업	58
산업부	태양광발전 기업공동 활용 연구 센터 구축사업	100
산업부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	34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해상풍력단지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실증)	20
산업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75
산업부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	113
산업부	풍력 너셀테스트베드 구축(풍력너셀 테스트베드)	36
산업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70
산업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869
산업부	녹색혁신금융(융자)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370
산업부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70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450
산업부	수소생산기지 구축(중대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152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140
산업부	산업단지환경조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110
산업부	생태산업개발을통한미세먼지및 온실가스 감축(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	21
산업부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203
산업부	EV, 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30
중기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150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그린뉴딜유망기업 육성 100)	215
해경청	방제정건조(LNG 방제정 노후대체)	72
해경청	함정건조(하이브리드 3,000톤)	135
해경청	함정건조(하이브리드 3,000톤) (동해북방해역))	9
해수부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121
해수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11
해수부	친환경 어구보급	200
해수부	해양폐기물정화사업	444
해수부	선박용 LNG혼소와 무탄소연료 적용기술 개발	73
해수부	관공선건조 및 운영(친환경 관공선 건조)	94
해수부	수산자원조사선 건조(탐구7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56
해수부	수산자원조사선 건조(탐구8호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101
해수부	어업지도관리(9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390
해수부	어업지도관리(1,0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274
해수부	어업지도관리(3,000톤급 지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	15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40

부처	사업명	'21년 예산(억원)
해수부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191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그린 리모델링)	65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온실가스 저감시설 구축)	10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에너지 관리 효율화)	59
행안부	공공시설 옥상녹화(열섬 완화 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	29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명품 그린청사사업)	18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단계 옥상정원 조성사업)	55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청사 벽면 녹화 그린박스 사업)	5
행안부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미세먼지 저감 청사 조성)	42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61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526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국립공원 생태 문화. 교육 플랫폼 구축)	300
환경부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자연공원 생태공간 확충)	550
환경부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16
환경부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야생 생태계 복원)	132
환경부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사업)	7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4,676
환경부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	189
환경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4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128
환경부	댐유지관리(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 감시 체계 구축)	42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본류.지류 통합감시망 구축)	60
환경부	광역상수도 안정화(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광역))	156
환경부	광역상수도 안정화(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100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4,531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제주)	84
환경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지역자율) (도서지역식수원개발)	319
환경부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체계구축)	108
환경부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해수담수화) 사업	120
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52
환경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15
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및 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	3
환경부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57
환경부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
환경부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15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303
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폐열회수 등 에너지 과다소비 설비 지원)	85
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불소계 온실가스 전과정 관리기반 구축)	52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사업)	3,010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첨단장비활용 사업장 감시강화)	174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1,500

부처	사업명	'21년 예산(억원)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소규모 사업장 굴뚝 원격감시)	19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직접융자 및 기존 이차보전 지원금)	3,101

3) 지역균형뉴딜 자치단체 추가사업 발굴 추진

○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된 지역균형뉴딜의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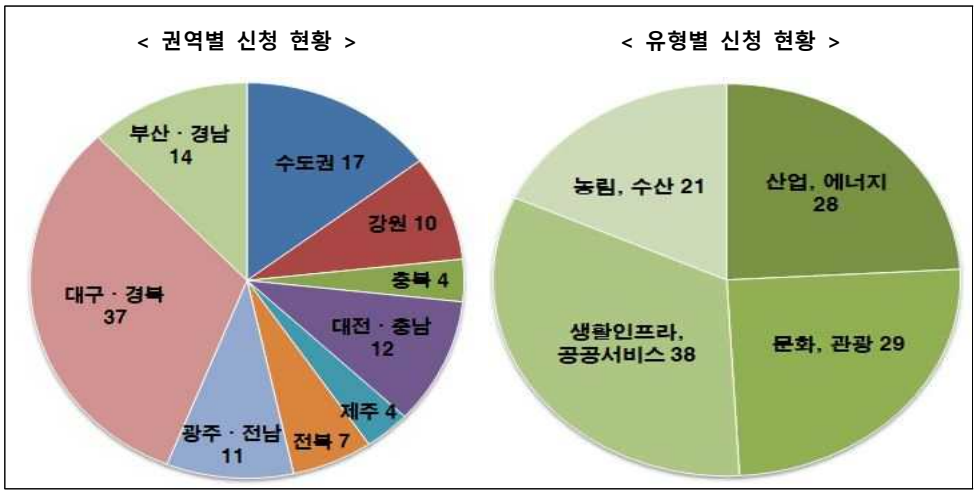
○ 그 대상은 한국판 뉴딜과 정합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아 균형발전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❶ 지자체 기획→부처 제안(Bottom-up) 가능한 사업 ❷ 지자체·공공기관 자체 사업에 국비매칭 필요 사업 ❸ 디지털・그린 뉴딜과 구체적 연계·통합 가능한 사업으로 함

○ 특징 적인 것은 사업의 주체 부분으로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의 경우 연계협력을 통한 복수의 시·도와 시·군·구 사업이 모두 대상이 됨

○ 추가사업에는 총 79개 지방자치단체 116건 신청(단일 112건, 연계협력4건) 접수 되었으며, 신청 사업비는 국비 7,676억 원, 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는 2조에 달함

<표 3-3>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신청 접수 현황(2021.6)

권역	신청건수(지자체 수)	권역	신청건수(지자체 수)
수도권	17(14)	전북	7(5)
강원	10(7)	전남	11(8)
충북	4(3)	경북	37(21)
충남	12(7)	경남	14(12)
제주	4(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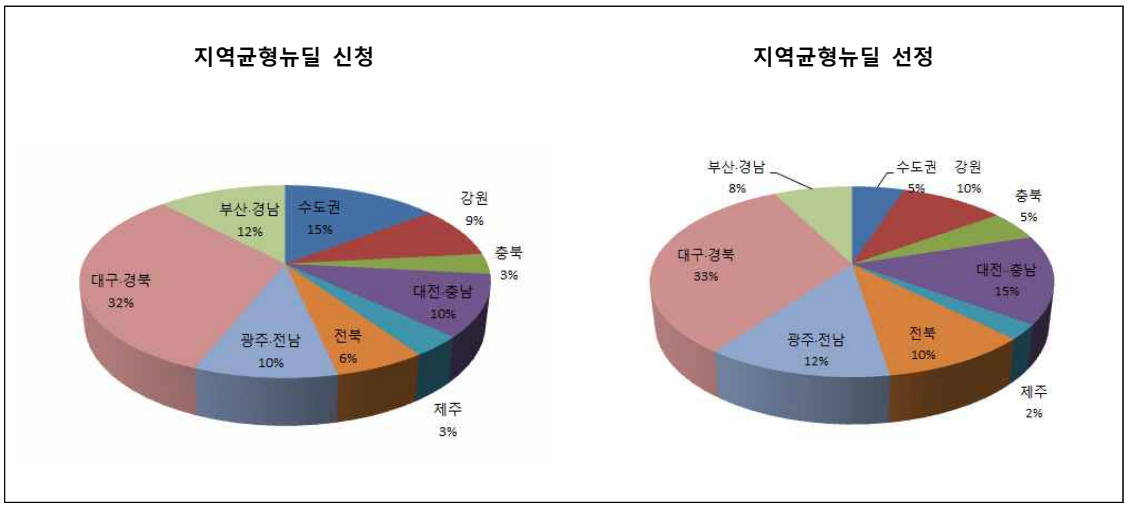


<그림 3-5>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신청 현황

○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부처의견 조회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총 40건이며, 총 사업비는 6,269억 원('22~'26, 5년간 국비 3,549억 원, 지방비 등 2,720억 원)에 달함

<표 3-4>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권역별 선정 현황

권역 (접수건 수)	선정건 수 (선정률,%)	총 사 업 비(억 원)		
		국비	지방비	기타*
수도권(17)	2(12)	40	11	6
강원(10)	4(40)	776	302	26
충북(4)	2(50)	110	52	-
대전·충남(12)	6(50)	801	582	111
제주(4)	1(25)	21	4	-
전북(7)	4(57)	165	165	-
광주·전남(11)	5(45)	301	238	40
대구·경북(37)	13(35)	1,105	711	238
부산·경남(14)	3(21)	230	234	
총계(116)	40(34)	3,549	2,299	421



<그림 3-6>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지역별 신청 및 선정 현황

2.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11)]

□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신청 접수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98건의 사업이 접수

○ 도시개조 분야 19건, 사회적 서비스 27건, 산업환경 11건, 주민여가 생활환경이 41건이었으며,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주민의 체감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주민여가 생활환경 분야의 사업이 전체의 약 42%를 차지함

□ 선정 결과

○ 총 48개 지자체 4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49.7억 원

- 이중 선정 신청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주민여가 생활환경 분야는 17건으로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 주도의 뉴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취지를 보여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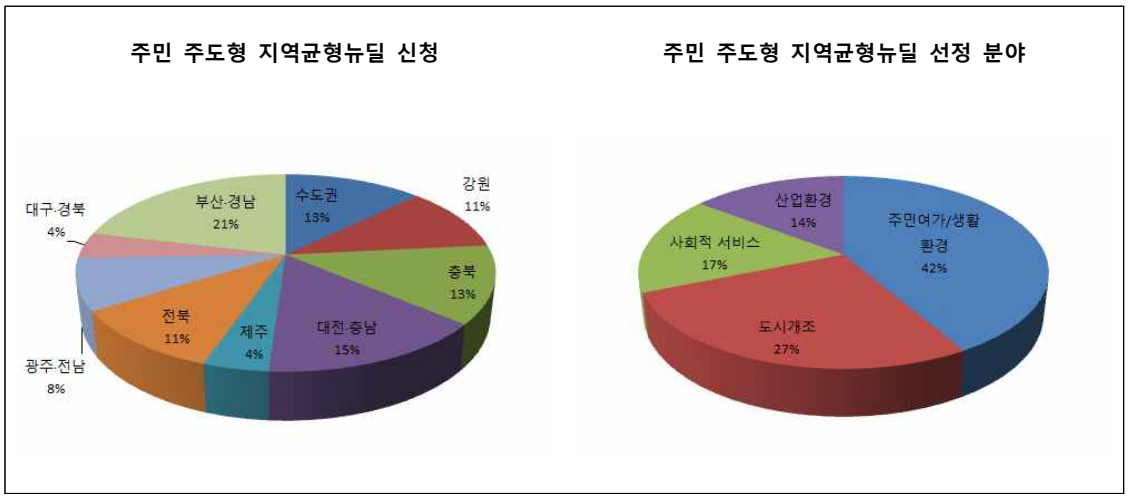
11) 2021년 12월 기준

〈표 3-5〉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결과

연번	시도	시군구	세부분야	제목	국비(백만)
1	서울	동대문구	주민여가 생활환경	박물관과 함께하는 AR기억여행과 메타버스 약령시장 구축	150
2	서울	성동구	도시개조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 구축 ※서울 성동구(대표), 경기 안성시·화성시 등 3개 지자체 협업사업	300
소계(서울)					450
1	부산	본청	주민여가 생활환경	애니메이션문화 및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운영	500
2	부산	북구	주민여가 생활환경	지역 카페(공동체)와 함께하는 향기 있는 자원순환 실천동행	73
소계(부산)					573
1	대구	본청	도시개조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민RE100 플랫폼 '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 ※광주 본청(대표), 대구 본청 등 2개 지자체 협업사업	500
소계(대구)					500
1	광주	본청	도시개조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시민RE100 플랫폼 '달빛동맹 햇빛찬란e' 구축 ※광주 본청(대표), 대구 본청 등 2개 지자체 협업사업	500
2	광주	동구	사회적 서비스	마을생활 문제해결 e플랫폼 우리동네do반장	250
소계(광주)					750
1	대전	본청	도시개조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재난 예측 플랫폼 구축	500
2	대전	대덕구	주민여가 생활환경	잘도 돌아가지구! 버리는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	250
3	대전	유성구	주민여가 생활환경	스마트한 유성, '꿈꾸는 재활용정거장' 조성	100
소계(대전)					850
1	세종	본청	도시개조	디지털 기술과 로컬크리에이터가 만드는'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500
소계(세종)					500
1	경기	군포시	주민여가 생활환경	주민참여 기반, 그림책 디지털 라키비움 플랫폼 조성	300
2	경기	안성시	도시개조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 구축 ※서울 성동구(대표), 경기 화성시·안성시 등 3개 지자체 협업사업	300
3	경기	화성시			300

연번	시도	시군구	세부 분야	제목	국비 (백만)
4	경기	의왕시	사회적 서비스	주민참여형 인공지능(AI) 기반 전기차충전소 통합관리 구축	300
소계(경기)					1,200
1	강원	삼척시	산업환경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구축사업	300
2	강원	영월군	주민여가 생활환경	한국판 뉴딜로 미래에너지 기지국으로 재도약하는, 영월	300
3	강원	인제군	도시개조	대중교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00
4	강원	정선군	주민여가 생활환경	디지털 뉴딜 교육 플랫폼 구축 (돼지털?NO,디지털!세상)	300
5	강원	춘천시	주민여가 생활환경	어린이의 손으로 만드는 봄내림 놀이터	300
소계(강원)					1,500
1	충북	보은군	사회적 서비스	경린이의 신통방통 경로당 사업	200
2	충북	괴산군	산업환경	스마트 옥수수가공 유통시설 설립	300
3	충북	영동군	도시개조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계도 시스템 구축	300
4	충북	제천시	산업환경	IoT 기반의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300
5	충북	진천군	산업환경	산림바이오순환시설로 그린뉴딜 추진	150
6	충북	청주시	주민여가 생활환경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문화 체감형 플랫폼 구축	300
소계(충북)					1,550
1	충남	본청	주민여가 생활환경	다회용 배달 박스 및 용기의 친환경 공유·순환시스템 개발	500
2	충남	논산시	사회적 서비스	100세 건강위원회 주도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	300
3	충남	보령시	도시개조	시민이 함께 그린(green) 에너지 플랫폼 만들어 보령	300
4	충남	아산시	주민여가 생활환경	자원순환마을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	300
소계(충남)					1,400
1	전북	본청	산업환경	신품종 복분자 디지털을 만나다	500
2	전북	김제시	산업환경	카메라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물꼬	210

연번	시도	시군구	세부 분야	제목	국비 (백만)
3	전북	남원시	주민여가 생활환경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 전북 남원시(대표)·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하동군·함양군 등 6개 지자체 협업사업	300
4	전북	장수군			300
5	전북	익산시	주민여가 생활환경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 (커뮤니티매핑기반우리동네기록화시스템구축)	300
소계(전북)					1,610
1	전남	구례군	주민여가 생활환경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 전북 남원시(대표)·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하동군·함양군 등 6개 지자체 협업사업	300
2	전남	여수시	사회적 서비스	인공지능 민·관통합 돌봄사업	100
소계(전남)					400
1	경북	본청	사회적 서비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차 탑재형 이동식 배터리 활용 데이터 기반 주문형 충전 서비스	500
소계(경북)					500
1	경남	본청	주민여가 생활환경	환경사랑 상품권과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500
2	경남	거제시	도시개조	AI 드론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300
3	경남	거창군	산업환경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조성	165
4	경남	산청군	주민여가 생활환경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 전북 남원시(대표)·장수군,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하동군·함양군 등 6개 지자체 협업사업	300
5	경남	하동군			270
6	경남	함양군			300
7	경남	남해군	사회적 서비스	스마트 로봇친구 디지털사랑방만들기	250
8	경남	밀양시	도시개조	LIVELY밀양 - 디지털 취약자도 쉽게 쓰는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300
소계(경남)					2,385
1	제주	본청	도시개조	잉여전력 및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조성	499
2	제주	서귀포시	사회적 서비스	메타버스 이용 주민주도형 안전건강마을 조성	300
소계(제주)					799



<그림 3-7>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선정 및 선정 분야 현황

3.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 검토의 시사점

○ 앞에서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자면, 한국판 뉴딜에서 지역사업으로 투자되는 재원이 4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이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정도임

○ 더불어, 여전히 지역별 특성이 딱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이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

- 디지털 뉴딜과 결합하거나 그린 뉴딜을 통한 특정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의 예산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지역 성장의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음
-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일자리에 목적을 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은 부족

○ 이와 함께, 추진을 위한 구조적인 형태를 보자면, 지역균형뉴딜과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경우도 선정에 있어 중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 테마가 되는 사업을 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남

○ 결국 새로운 지역균형뉴딜은 결국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한계를 보임

- 이는 곧 균특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경우에서 지역 혁신과 성장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임

- 이에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뉴딜은 세부적으로 주민의 삶이 우선되는 지역 우선의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

지역균형뉴딜은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지역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3절 지역균형뉴딜 추진 분야와 유형

1.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분야별 검토

○ 현재까지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종합한 결과 크게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 분야로 구분되며, 한국판 뉴딜의 지역 중심 사업,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 공공기관 주도 지역균형뉴딜은 거의 유사한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동시에 지자체별로 지역균형뉴딜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사업이 디지털과 그린 뉴딜로 구분되어 있을 뿐 지역체감의 정도는 미약하고, 나머지 분류도 매우 자의적이어서 이 중에서도 사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새롭게 지역균형뉴딜의 세부적인 분야와 추진 유형을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함

○ 물론, 지역이 주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다가가고 있기는 하나, 해당 사업의 차별성, 지역 특성의 반영에 대한 고민들이 향후 더 담겨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이하에서는 관련하여 현재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지역균형뉴딜의 분야를 검토해보고, 이어서 사업 추진의 유형을 구분해 살펴보고자 함

〈표 3-6〉 지역균형뉴딜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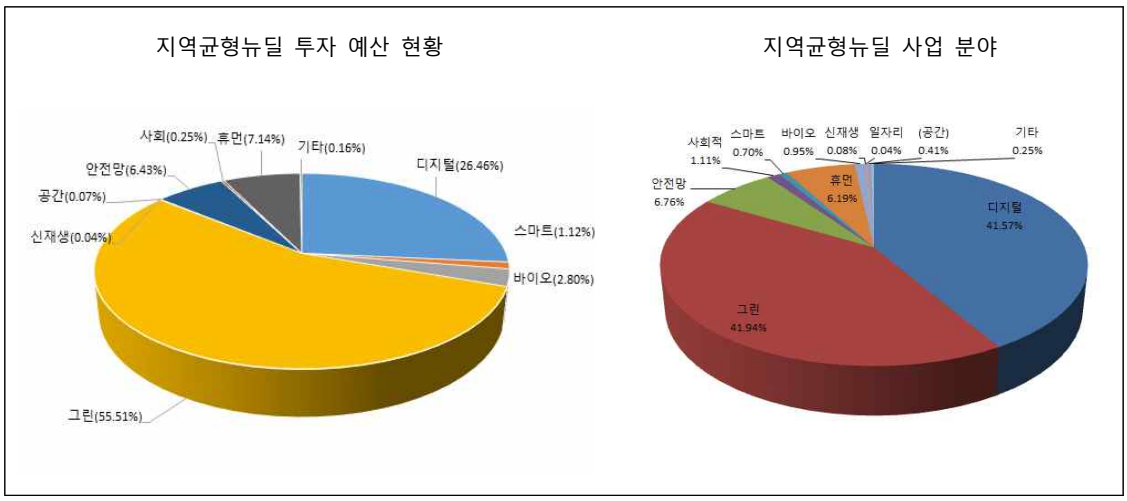
(건 / 억 원)

시도/유형	계	디지털	그린	안전망	사회	스마트	휴먼	바이오	신재생	일자리	(공간)	기타
총계 (건)	2,425	1,008	1,017	164	27	17	150	23	2	1	10	6
서울	80	43	26	11	-	-	-	-	-	-	-	-
부산	69	9	48	2	-	-	-	-	-	-	10	-
대구	182	60	48	-	-	-	74	-	-	-	-	-
인천	210	59	75	-	-	-	56	20	-	-	-	-
광주	139	67	72	-	-	-	-	-	-	-	-	-
대전	82	41	35	6	-	-	-	-	-	-	-	-

시도/유형		계	디지털	그린	안전망	사회	스마트	휴먼	바이오	신재생	일자리	(공간)	기타
울산		77	40	19	10	-	3	4	1	-	-	-	-
세종		59	27	14	12	-	-	-	-	-	-	-	6
경기		60	18	19	7	-	-	16	-	-	-	-	-
강원		55	33	22	-	-	-	-	-	-	-	-	-
충북		63	32	29	2	-	-	-	-	-	-	-	-
충남		763	352	359	49	-	2	-	1	-	-	-	-
전북		198	64	108	24	-	-	-	-	2	-	-	-
전남		70	35	35	-	-	-	-	-	-	-	-	-
경북		164	85	46	33	-	-	-	-	-	-	-	-
경남		143	37	59	6	27	12	-	1	-	1	-	-
제주		11	6	3	2	-	-	-	-	-	-	-	-
투자예산	국가	77,456.5	25,559.9	38,098.1	7,014.0	227.1	1,320.0	4,674.7	191.1	32.5	-	78.0	261.1
	지방	72,009.4	18,531.4	38,360.0	5,779.1	286.0	935.0	7,902.8	77.6	-	-	63.5	74.1
	기타	59,213.7	12,526.1	38,574.0	509.0	4.7	42.0	2,034.1	5,463.8	56.5	-	2.0	1.5
	계	208,679.6	54,116.9	113,530.1	13,155.4	517.8	2,297.0	14,611.6	5,732.5	89.0	-	143.5	336.7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2021)

주 : 일부 미분류 등 정의되지 않은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투자액은 2021년 기준



<그림 3-8> 지역균형뉴딜 투자 현황과 사업 분야

○ 지역균형뉴딜의 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디지털 분야와 그린 분야가 각 약 42%정도로 전체 분야들 중 두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83%를 상회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역균형뉴딜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투자액 중 디지털 분야가 약 25%를 차지하고, 그린 분야가 약 56%를 차지함으로써 두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안전망, 사회, 휴먼 분야는 전체 투자액 중 14%정도에 그치고 있음

○ 결국, 현재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현실은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사업 보다는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국가 성장아젠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7> 자자체별 지역균형뉴딜 사업 대표적 내용(서울)

분야		사업 명	세부영역
한국판 뉴딜	그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국시비 매칭)	환경 및 에너지
	그린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환경 및 에너지
	그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환경 및 에너지
	그린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 및 에너지
	디지털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특별교부세)	도로 및 교통
	디지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디지털	차량기지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유통
	디지털	미래형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통
	디지털	지능형 디지털 3D 기반의 역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통
	디지털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의 전동차 정비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통
	디지털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의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통
	디지털	IoT 기술활용 실시간 철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통
	디지털	1~9호선 지능형 SMART 통합관제센터 구축	도로 및 교통

분야		사업 명	세부영역
	디지털	2호선 열차 자동운전 시스템 구축	도로 및 교통
	디지털	레일 안전 Digital화를 위한 레일탐상차 교체	안전
지자체 자체사업	그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건축 환경
	그린	신축건물 ZEB 가속화	건축 환경
	그린	따릉이 인프라 구축	도로 및 교통
	그린	CRT 네트워크 구축	도로 및 교통
	그린	도로공간 재편	도로 및 교통
	그린	태양광 발전 사업 공모	에너지
	그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숲 조성	건축 환경
	그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도로 및 교통
	그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시소유건물, 경로당)	건축 환경
	그린	가꿈주택	건축 환경
	그린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건축 환경
	그린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시자체사업)	에너지
	그린	민간부문 태양광보급	에너지
	그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에너지
	그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	에너지
	그린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운영	에너지
	그린	태양광 시민탐사대 운영으로 설치가능부지 발굴(*뉴딜일자리 예산)	에너지
	디지털	AI 양재 허브 운영	산업
	디지털	AI 양재 허브 확충 및 앵커시설 조성	산업
	디지털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산업
	디지털	포스트코로나 특화 AI 기술개발 지원	산업
	디지털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
	디지털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업
	디지털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산업

분야		사업 명	세부영역
	디지털	패션산업 온라인 판로 지원	산업
	디지털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통신
	디지털	공공 와이파이 확대 조성	통신
	디지털	공공 사물인터넷망 구축	통신
	디지털	센서 기반 도시데이터 수집 및 스마트폴 설치	통신
	디지털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데이터
	디지털	민관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디지털	공공데이터 개방 및 분석서비스 제공	데이터
	디지털	전사적 AI 시스템 구축	데이터
	디지털	지능형 통합 플랫폼 구축·확산	데이터
	디지털	학습데이터 구축 개방	데이터
	디지털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데이터
	디지털	사이버 안전도시 서울 구현	안전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안전
	디지털	키오스크 체험존	생활 인프라
	디지털	어디나지원단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생활 인프라
	디지털	사랑의 PC 보급	생활 인프라
	디지털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생활 인프라
	디지털	일자리 연계 지도 데이터 구축 사업	산업/데이터
	디지털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계속]	도로 및 교통/데이터
	안전망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산업 및 일자리
	안전망	서울형 뉴딜일자리	산업 및 일자리
	안전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
	안전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기준 폐지	생활밀착형 복지
	안전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생활밀착형 복지
	안전망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복지
	안전망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복지

분야		사업 명	세부영역
	안전망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보건 및 복지
	안전망	키오스크 체험존	생활밀착형 복지
	안전망	어디나지원단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	생활밀착형 복지
	안전망	비대면 직업교육훈련 확대 추진	산업 및 일자리
타사업 국비보조 확정사업, 국비 필요사업	그린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환경
	그린	공공부문 전기 수소차 의무 도입	환경
	디지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보건의료
	그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확대	환경
	그린	레일 분진 Zero 친환경 레일밀링차 구매	도로 및 교통
	그린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터카 도입	환경
	디지털	CCTV 기반 도시데이터 활용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	안전
	디지털	디지털 역량교육 체계 구축(과기부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디지털	서울 데이터서포터즈	데이터
	디지털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

주 : 세부 영역은 연구자가 사업 내용에 맞게 임의 분류

〈표 3-8〉 지역균형뉴딜 중점 추진 사업 예시

도시	사업 내용	분야
인천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 물류로봇 R&D 및 로봇 혁신 클러스터 조성	- 교통 - 산업
경기	-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도민이 누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 - 반월시화 그린산업단지 조성 -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데이터 - 에너지
강원	- 삼척, 동해, 강릉에 지정된 액체수소 규제 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인 액체수소 분야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여 신산업 성장 추진	- 에너지 - 산업 - 환경

도시	사업 내용	분야
	-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 연어 스마트 양식 산업화	
대전	- 대덕 R&D 특구와 협업을 통해 AI 기반 지능형 도시 대전을 구축 - 첨단센서소자 제조,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 드론산업 메카 조성 - 무선통신 정밀기기부품 기반 연계 고도화 사업	- 산업
세종	- 자율주행 실증사업 - 자율주행 실외로봇 - 드론실증도시 구축 - 스마트 시티 조성	- 산업 - 도료 및 교통
충북	-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3D 생체조직칩 실증 사용화 인프라 구축 - 태양광 ESS 융복합 부품 시스템 제조, 검증 실증센터 구축 -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 산업 - 환경 - 보건의료
충남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 차량용 AI반도체산업 육성 - 충남 스마트 융합 R&D 집적지구 조성	- 에너지 - 산업
부산	-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전기차 e 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 -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구축 -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 산업 - 환경
대구	-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 미래형 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 구축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 산업 - 도로 및 교통
울산	-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 AI 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 - ICT 융합 전기 추진 스카트 선박 건조 및 실증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구축	- 산업 - 유통 - 도로 및 교통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 산업용 햄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 에너지 - 산업
경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 그린 뉴딜 결합시킨 추진 방향 제시 -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 기반 산업

도시	사업 내용	분야
	- 항공산업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 액화수소 실증플랜트 구축 및 운영사업	
광주	-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조성 -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 드론 기술개발 -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 -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	- 산업 - 에너지
전북	-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 -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 - 차량용 AI 반도체 산업 육성 - 충남 스마트 융합 R&D 집적지구 조성	- 에너지 - 산업 - 도로 및 교통
전남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에너지 산업 발전 - 상생형 일자리 조성 - 백신 면역치료 허브 조성	- 에너지 - 보건의료 - 일자리
제주	- 청정과 공존의 제주 비전과 뉴딜을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적극 추진 - 광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제주형 수소경제 구축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 환경

○ 이와 함께, 서울과 지역별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살펴보면, 이 역시 산업, 환경, 에너지, 도로 등이 중점이 되고 있을 뿐,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 더불어, 지역균형뉴딜이라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했던 정책사업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역 사회의 미래 비전과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이 국가균형발전과 어떠한 맥락으로 맞닿아 있는지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가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즉 지역균형뉴딜은 '지역주도형 뉴딜'의 확장으로써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1) 주민 참여 과정 및 의견 반영 , 2) 지역 사회 공동체 활용 정도, 3) 중간지원조직의 활용 등이 명시적인 요건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추출해 내는것이 필요함

○ 즉, 지역균형뉴딜 사업이라고 하면 이러한 주민 참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내지 사업을 지역에서 시행하는 의미로써 접근은 지양하여야 함

○ 위의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음

<표 3-9>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대표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중앙사업의 지역 집행정도 수준에 머무름	지역 사회 문제 인식에 능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필요
사업 발굴에의 창의성 부족	다양한 사례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의 반복을 하고 있으므로 균형발전 예산에서 유사 중복 사업 배제
기존 국가균형 발전 사업과 차별성 부재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의 예산 품목 변화에 불과한 사업들 배제
사업 영역의 한정성	다양한 신성장 미래 산업 기반의 영역 확장
주민 참여 과정의 부족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 현실화

2.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유형별 검토

○ 지역균형뉴딜의 추진 분야의 분석과 함께 유형에 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사업의 추진 유형에서의 현황을 확인하도록 함

○ 지역균형뉴딜은 애초 1유형으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그리고 2유형으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3유형으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이 제시되었음

○ 즉, 유형의 분석을 통해서도 사업의 추진 주체나 성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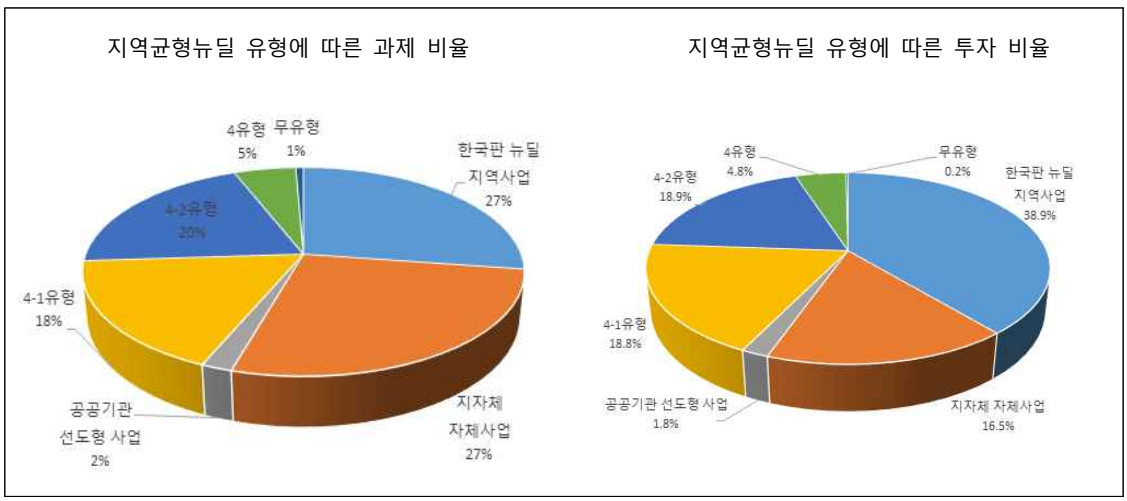
〈표 3-10〉 지역균형뉴딜 사업 유형별 현황

시도/유형	과제수(건)	투자 규모(억 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총계	2,425	1,845,428.7	537,240.0	399,081.0	910,176.8
서울 (소계)	80	53,057.9	8,528.5	44,529.4	-
1유형	15	13,852.0	4,398.5	9,453.5	-
2유형	55	31,825.9	-	31,825.9	-
4-1유형	3	5,270.0	3,023.0	2,247.0	-
4-2유형	7	2,110.0	1,107.0	1,003.0	-
부산 (소계)	69	66,379.5	20,912.4	37,750.4	8,202.7
1유형	15	5,085.4	3,201.7	2,243.7	125.0
2유형	8	4,605.0	140.0	3,195.0	1,270.0
3유형	7	15.5	9.0	6.0	0.5
4-1유형	15	8,520.5	5,510.5	2,080.9	929.2
4-2유형	24	48,153.0	12,051.2	30,224.8	5,878.0
대구 (소계)	182	109,171.2	36,807.9	22,351.9	50,011.7
1유형	29	21,457.4	14,286.3	6,800.2	371.0
2유형	61	53,366.8	2,396.9	6,785.4	44,184.6
3유형	1	900.0	-	-	900.0
4-1유형	91	33,447.0	20,124.8	8,766.3	4,556.1
인천 (소계)	210	144,336.3	29,521.5	36,785.8	78,029.1
1유형	34	8,175.4	3,472.1	3,413.7	1,289.7
2유형	74	76,632.2	-	14,351.3	62,281.0
3유형	10	472.5	104.0	177.0	191.5
4-1유형	49	28,921.4	12,508.9	6,728.0	9,684.5
4-2유형	43	30,134.8	13,436.6	12,115.8	4,582.5
광주 (소계)	139	71,141.3	27,576.6	19,470.7	24,106.2
1유형	52	29,352.4	16,504.8	6,600.4	6,255.4
2유형	49	24,046.4	-	8,453.6	15,596.8
4-1유형	13	4,510.8	2,627.9	1,862.9	20.0
4-2유형	25	13,231.8	8,443.9	2,553.9	2,234.0
대전 (소계)	82	59,455.7	25,321.3	19,539.1	16,093.9
1유형	16	6,763.6	2,409.2	3,063.1	1,291.3
2유형	13	4,589.5	4.5	4,669.6	-
3유형	2.0	10,040.0	20.0	13.0	10,007.0
4-1유형	19	14,916.6	8,453.8	5,653.7	809.0
4-2유형	32	23,146.1	14,433.7	6,139.7	3,986.6
울산 (소계)	77	511,530.0	58,348.2	38,477.4	414,704.4
1유형	39	444,682.1	31,461.3	17,548.6	395,672.2
2유형	23.0	19,969.9	-	5,403.9	14,566.0
4-1유형	7	18,102.0	9,169.8	4,827.0	4,105.2

시도/유형		과제수(건)	투자 규모(억 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4-2유형	8	28,776.0	17,717.1	10,697.9	361.0
세종	(소계)	59	23,439.4	5,128.6	4,359.3	13,951.5
	1유형	10	1,409.0	1,179.0	196.0	34.0
	2유형	23	2,214.7	-	193.2	2,021.5
	4유형	26	19,815.7	3,949.6	3,970.1	11,896.0
경기	(소계)	60	35,041.2	9,683.5	19,491.9	5,865.8
	1유형	4	1,212.6	372.4	796.2	44.0
	2유형	38	14,731.5	-	10,713.0	4,018.5
	4-1유형	18	19,097.1	9,311.1	7,982.7	1,803.3
강원	(소계)	55	37,652.6	14,672.3	15,652.6	8,026.7
	1유형	15	12,573.4	4,362.1	2,566.6	5,644.7
	2유형	10	375.3	-	396.3	3.0
	3유형	2	200.0	120.0	80.0	-
	4-1유형	7	7,016.0	3,317.2	3,198.8	500.0
	4-2유형	21	17,487.9	6,873.0	9,410.9	1,879.0
충북	(소계)	63	32,954.9	11,697.6	8,923.7	12,333.7
	1유형	43	30,765.4	10,911.8	8,147.6	11,706.1
	2유형	12	309.3	-	305.7	3.6
	3유형	1	45.0	45.0	-	-
	4-1유형	4	920.2	509.8	330.4	80.0
	4-2유형	3	915.0	231.0	140.0	544.0
충남	(소계)	763	135,080.2	53,858.6	45,937.2	37,263.9
	1유형	241	42,151.9	16,381.2	11,715.7	14,534.2
	2유형	229	5,240.7	54.9	5,417.6	229.3
	3유형	9	581.1	90.0	91.7	399.4
	4-1유형	98	11,487.1	3,532.8	3,060.8	4,623.5
	4-2유형	186	75,619.4	33,799.7	25,651.4	17,477.5
전북	(소계)	198	63,399.5	38,582.1	14,302.7	8,918.2
	1유형	58	16,802.8	9,184.1	4,256.7	628.0
	2유형	12	530.0	-	370.0	160.0
	3유형	9	1,139.0	755.0	27.5	355.5
	4-1유형	66	28,373.4	16,270.6	6,500.7	6,740.7
	4-2유형	53	16,554.3	12,372.4	3,147.9	1,034.0
전남	(소계)	70	100,677.0	32,164.0	12,483.0	54,020.0
	1유형	14	21,009.8	5,293.4	1,266.4	14,440.0
	2유형	4	65.0	-	55.0	10.0
	3유형	3	3,555.0	1,805.0	-	1,750.0
	4-1유형	9	10,790.0	6,862.0	3,858.0	70.0
	4-2유형	40	65,257.2	18,203.6	7,303.6	37,750.0
경북	(소계)	164	110,127.2	57,985.2	28,408.0	23,734.0
	1유형	31	35,705.0	16,575.0	9,264.0	9,866.0
	2유형	14	1,450.0	-	606.0	844.0

시도/유형	과제수(건)	투자 규모(억 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4유형	103	69,415.2	39,554.2	17,403.0	12,458.0
무유형	16	3,557.0	1,856.0	1,135.0	566.0
경남 (소계)	143	286,302.7	103,721.7	29,352.0	153,229.1
1유형	40	22,996.4	12,931.8	7,104.3	2,960.3
2유형	32	65,099.5	-	1,905.5	63,194.0
3유형	2	15,590.7	-	600.0	14,990.7
4-1유형	27	156,013.7	77,745.3	12,212.4	66,056.0
4-2유형	42	26,602.4	13,044.6	7,529.8	6,028.1
제주 (소계)	11	5,682.0	2,730.0	1,266.0	1,686.0
1유형	6	3,848.0	2,662.0	1,056.0	130.0
2유형	2	157.0	-	157.0	-
3유형	1	1,556.0	-	-	1,556.0
4-2유형	2	121.0	68.0	53.0	-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2021)



주 : 무유형, 4유형, 4-1유형, 4-2유형은 자료 구성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지역균형뉴딜이 제시한 3가지 유형 외 형태를 가진 사업임

<그림 3-9> 지역균형뉴딜 유형별 비율 및 투자 비율

○ 추진 유형별 분석의 결과를 과제의 구성비율과 예산의 투자 비율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먼저, 과제 비율에서는 1유형인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2유형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이 유사한 수준으로 두 영역의 합이 50% 이상 나타났으나, 3유형인 공공기관 선도형의 경우는 2% 정도에 그침

- 이와 함께 투자 비율에 따른 구성을 보면, 1유형인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이 약 39%에 달한 반면, 2유형인 지자체 주도형이라 할 수 있는 지자체 자체사업은 16.5%에 그치고 있고, 3유형의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3. 현황분석의 시사점

○ 지자체 추진 지역균형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현재 구분하고 있는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영역은 광범위한 구분으로 보다 더 세밀한 영역 구분이 필요함

- 구분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지자체에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분석의 결과 각 영역은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유형의 경우에서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 중심의 뉴딜은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할 수 있음

○ 셋째, 각 영역은 중복되거나 독자적인 사업이 혼용되어 있어 디지털과 그린이 중복되거나 또 다른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한 부분이 다소 존재함

- 이하 디지털과 그린 영역 불문하고 1) 교육, 2) 문화, 3) 보건의료, 4) 복지, 5) 주민 안전, 6) 도로교통, 7) 유통, 8) 산업 및 일자리, 9) 환경 및 에너지, 10) 데이터 및 통신, 11) 건축 환경이라는 세부적인 요소로 구분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도 교육과 문화, 복지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사업이 부족하여 해당 영역의 확대가 필요

- 그린 뉴딜은 대부분 산업 및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육과 주민참여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 존재

- 또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 주도 사업에서 각각 주력하는 사업들이 있었으나, 지자체 주도 사업에서는 특히 복지 및 생활인프라 확산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에 반하여 공공기관 주도 사업은 추진과제의 정도와 투자예산의 부분에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자리 및 기업 지원으로 대표되는 산업 영역의

확산을 기대 해 볼만 함

○ 결국,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은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괄 가능하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화, 교육, 복지, 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사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그린과 디지털이라는 큰 맥락의 두 부분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정책수요자와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음

○ 특히 영역을 새롭게 구분해서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지역균형뉴딜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민 생활과 관련한 보건복지 부분에서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교육분야와의 연계사업 발굴과 지원이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4절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적 혁신을 강조하는 사업의 경우, 주요 구성요소로 혁신성이 강조되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직접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문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볼 때 여기서 소개하는 지자체의 사례는 기술적 혁신 뿐만 아니라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성이 함께 고려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이절에서 소개하게 될 사업들은 중앙정부 주도에 따른 외생적 요소에 대한 의존성과 외부 기업 의존 형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 및 확산에까지 이르는 과정의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1.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

□ 춘천시 3D프린팅 순환경제 실증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환경문제 및 경제적 부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건설이 곤란한 상황에서 시민주도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필요

- 지속적 재활용 폐기물의 증가상황 속 실 재활용률은 50% 수준
- 춘천시의 경우, 매립시설 사용 연한이 2040년에서 2028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포화 수준에 달함

○ 3D프린팅 산업을 폐플라스틱 순환경제와 연계하여 지역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 3D프린팅 기반 플라스틱 창작소 플랫폼 조성

○ 주민자치회, 마을자치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활용 폐

플라스틱 수거(리필트럭 활용) → 수집된 폐플라스틱 활용으로 공공조형물과 편의시설 제작

- 리필트럭은 강원도 소재 전기트럭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전기차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폐기물 최소화 및 탄소중립을 위해 활용하는 사업
- 춘천사회혁신센터가 지자체 내부 협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리필트럭 운영 및 3D프린팅 제작

○ 리빙랩을 활용한 주민의견 수렴 및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 추진

-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상·하반기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퀴즈 풀기, 체험 활동 인증 체험 소감 제출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확대
- 리필트럭 이용에 대한 시민 대상 의견수렴도 진행

[기대효과]

○ 폐플라스틱 3D프린팅으로 재활용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강화

- '24년까지 폐플라스틱 50% 감량 및 재활용 선별률 80%를 목표로 함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체감형 자원순환 문화조성

- 마을 자치조직 활성화 추진, 자원순환 활동가 양성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위원회 및 마을단위 자원순환 활동 시민 모임 등 운영 지원

○ 지역 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 디자인 분야 활용

□ 곡성군 섬진강 상상더하기 미디어아트여행플랫폼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섬진강 홍수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음

○ 지역문화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래형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 고유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필요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 미래형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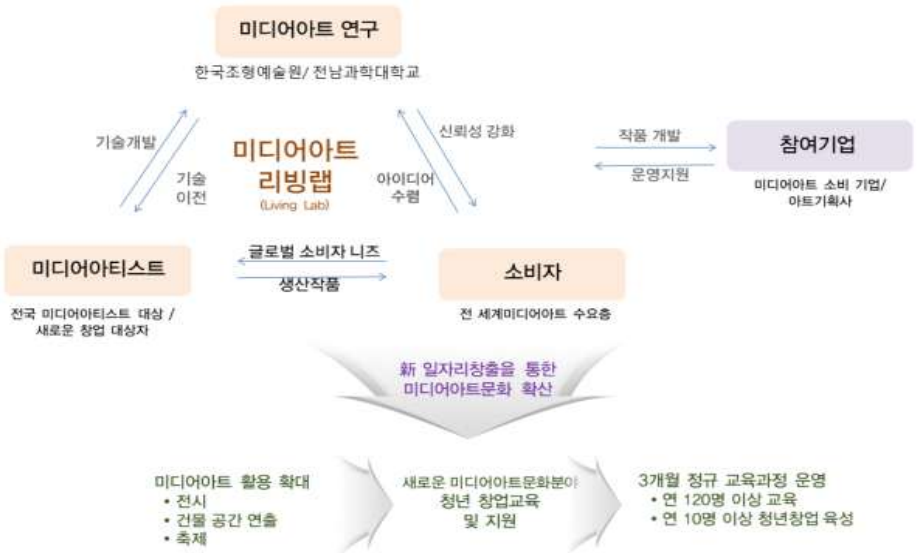
- 미디어아트 여행프로그램 개발(기차역별 내·외부공간 미디어아트쇼, 미디어 파사드 연출, 미디어아트데이 축제)
- 미디어아트 여행 인프라 조성(빅데이터, AI기반 미디어아트 콘텐츠 구축)

○ 아트여행 통합플랫폼 구축(섬진강 일원 체험 관광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

○ 미디어아트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통합마케팅 지원

○ 미디어아트 리빙랩 구축 및 운영

- 곡성관광 DMO, 한국조형예술원, 전남과학대학교 중심의 미디어아트 리빙랩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디어아트 문화 장착



<그림 3-10> 곡성군 상상더하기 미디어아트여행플랫폼 리빙랩 운영 체계

[기대효과]

○ 미디어아트 여행을 통한 체류형 관광문화 조성

- 지역 관광자원과 미디어아트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 관광소비 수요 창출 및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속가능한 예술관광 HUB 조성

□ 당진시 융복합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인구의 고령화, 경지면적의 감소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의 골든타임 상황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각됨

○ 경지규모별 구조가 중농 중심에서 소농 중심으로 재편되고 쌀・감자・고구마 등 특정 작물에 집중된 생산구조하에서 농업 소득을 보전,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농촌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 필요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반조성, 에너지공급, 생산・판로・통합마케팅 지원, 행정지원

- 자립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 스마트팜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라운지, 직매장, 공동작업장, 체험장, 교육장, 스마트팜 창업 및 마케팅 지원)
- 스마트 물류시스템 도입(ICT 기반 스마트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동선별, 저온저장, 이력 추적 지원)
- 수출 전략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약용작물 등 수출유망 작물 집약적 생산)
-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먹거리 통합시스템 구축

-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립형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 스마트 시설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스마트팜혁신 밸리 조성 사업계획 수립

○ 원예단지 조성관련 지역농업법인과의 회의, 마을리더와외 시민토론회, 농업인 단체 설명회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문제 해결

[기대효과]

○ 농업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스마트 농업 중심지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로 도·농 상생의 균형발전 도모

2.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시사점

○ 이상의 사업들은 중앙정부 주도에 따른 외생적 요소에 대한 의존성과 외부 기업 의존 형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기술 개발 및 확산까지 과정의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지역의 내생적 능력 향상, 기존 공급자 중심의 사회 정책이 지니는 비효율성을 벗어난 지역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사회적 자본의 혁신 역량 강화의 계기 마련을 통해 주민의 주체적 의식을 함양하는 등 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지역주민, 사업 참여 기업, 사업 지원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이 가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워크샵, 실무회의 등 네트워킹와 전문가 자문회의, 설명회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자원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의 지역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넓히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제5절 지역균형뉴딜의 함의

1. 추진 현황에서 나타난 이슈

○ 한국판 뉴딜에서 출발한 지역균형뉴딜은 자치단체 즉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새롭게 확장시킴

○ 더불어 더욱 진보된 주민참여의 방법을 통한 주민의 참여와 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추진은 그간 중앙정부와 관 중심의 사업에서 주민의 참여를 전면에 등장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가치를 주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약적인 부분도 발견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식의 시험적인 노정이 필요함

○ 특히, 현황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여전히 지역균형뉴딜의 사업에서 주민과 자치단체가 내생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해 지역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임

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방향 탐색

○ 2022년 1월과 2월에 중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FGI)를 2회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현장에서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및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 본 인터뷰는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사업의 분야와 유형 등 사업의 정책목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와 함께 자치단체 현장에서 사업의 추진을 담당했던 실무적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동시에 포함했음

□ 전문가 그룹 인터뷰

○ 먼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한 인터뷰의 경우 지역균형뉴딜의 정책적

인 의미와 방향성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중심으로 주요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아래와 같음

-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전개되었던 정책들 중에 가장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의 넓은 부분을 포괄했던 사업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언급하기에는 손색이 없음
- 지역균형뉴딜사업의 경우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디지털과 그린, 휴먼의 분야가 과연 적절한 접근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역균형뉴딜이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
- 주민주도의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발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한국판 뉴딜의 사업 중 대부분이 지역균형뉴딜과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주도형 사업이 거의 없고, 더욱이 지역은 지금껏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본적이 없다고 봐야 함
-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아이디어와 정책 수준이 예상외로 낮으며, 미세한 사업을 접할 기회는 더욱 부족한 실정임, 또한 군단위에서의 사업기획은 매우 저조한 수준임
- 현재와 같이 기존 추진 사업에 디지털 또는 휴먼, 그린만 붙여서는 지방정부 추진사업에 사람이 아닌 물질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날 것임
- 지역균형뉴딜이 가진 목적을 위해 기존의 균형발전사업과 초광역협력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고, 오히려 초광역협력이 새로운 방식일 수 있음
- 재원의 부분에서 기존의 보조금 성격을 유지한체 균특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의 권한만 강화하게 될 것인 바, 재원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고민 필요

○ 그 외, 전문가 그룹에서의 의견으로는 초광역협력의 관점에서 리빙랩, 교육부분에서의 초광역 모델, 광역철도망의 구축, 초광역과 초기초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구축 등 의견이 제시되었음

○ 더불어, 주민과 공무원의 역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다양한 사례와 주민과 전문가의 연계를 통한 지역의 혁신 주체로써 역할 등에 대한

고려 등 지역의 혁신주체에 관한 발전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현장 전문가 인터뷰

○ 현장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이 전문가 그룹에 비해 협소한 단점이 있지만, 논의된 내용(추진사업)에 있어 현장에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작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의 주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균형뉴딜의 경우 범부처 투자를 통한 다양한 분야들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처사업은 주민중심이라기 보다는 지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주민 체감이 낮음
- 지역 뉴딜과 관련하여 실제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사업정도로 손에 꼽을 수준이며, 따라서 주민의 만족과 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히 부족할 것임
- 특히, 지역의 공공기관 주도 사업의 경우도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역 공공기관들의 예산구조의 현실적인 상황을 들여다 본다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자발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임
- 실제 뉴딜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업들이 별도의 예산을 수반한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미 시작한 과제나 사업 중 관련 기술이나 방향성을 가진 것을 뉴딜사업의 실적과 성과로 정리하고 있고, 이는 자치단체의 실적확보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어지는 치단체들 간의 지나친 경쟁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음
- 더불어 지역 경제정책을 기점으로 연계한 정책의 경우도 사업비의 대부분이 R&D 와 비R&D의 형태로 기업에게 투자(기업지원)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지역과 주민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양적 투자가 필요

○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초광역협력의 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몇 가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음

- 메가시티 그리고 초광역협력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보자면 고도화 기반이 없는 자치단체는 끼어 들어갈 여지가 여전히 부족한데, 이는 결국 국가예산의 투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의 자치단체 즉, 산업성장의 인프라가 부족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역격차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이 산업을 선정할 때에 중앙부처에서 적정성 등 검토 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는 과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지자체의 자유도는 제한됨
- 지금의 메가시티 그리고 초광역사업은 혁신적인 산업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자치단체가 보유한 인프라의 정도에 따른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부분의 초광역 협력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진 곳에 더 이득이 되는 불균형적인 성장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약점이 있음

○ 현장 전문가 의견의 경우 결국은 지역이 가진 내재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정책의 추진 그리고 자생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나 장치의 부족에서 나타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에서의 컨설팅과 공모 선정의 절차, 국가매칭예산의 투자대비 효율 등의 문제는 납득할 수 있지만,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버거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중앙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음

3.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함의

○ 지역균형뉴딜의 사업 분야와 유형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특색의 차이가 정책 시행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결국 이는 지금의 지역균형뉴딜이 진정한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각 지역의 환경 등 내재적 특성에 맞는 산업 발굴에 주력하기

위하여 지역의 혁신자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전문가의 사업 시행 타당성 검토 등의 단계가 필수적인 것에서 나아가 질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존재함

○ 무엇보다 지역균형뉴딜의 성공은 한국판 뉴딜과의 연계를 지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달성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지역경제, 산업 특성, 환경 특성, 공간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한계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업을 연계 및 확장하여 지역의 내재적인 잠재력을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 발굴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을 구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교육 기관 등 지역의 혁신자원들과의 연계, 기업과의 협업 등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창의성을 확보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 아래 관련 조례의 제정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고, 더불어 자치단체는 지역의 혁신자원들과의 네트워킹과 실무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지역균형뉴딜의 추진을 위한 구조적인 형태를 보자면, 지역균형뉴딜과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경우도 중앙이 사업의 선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중앙정부의 정책 테마가 되는 사업을 구성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러한 경향성은 곧 국가균형발전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과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경우도 중앙이 테마가 되는 사업을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등 여전히 지방은 ‘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중앙이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그 중심이 되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의 주제를 택할 때에도 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에 내몰리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전개되었던 정책들 중에 가장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의 넓은 부분을 포괄했던 사업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언급하

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현재의 지역균형뉴딜이 완전히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써는 지금의 노력이 과거의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폭넓게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더욱 지역의 자생적이고 내재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제4장 지역균형뉴딜 2.0 추진 전략

제1절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체계

1. 지역주도 지역균형뉴딜 방향

○ 지역사회의 성장 비전과 맞닿지 않아 내생적인 성장의 한계가 존재

-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대비해서 헌법적 가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
- 결국, 주민 참여의 과정과 의견의 반영이 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게 포함될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지역의 혁신자원들이 중간조직으로 활용되어야 함

○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정책과 광역협력사업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주도의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

- 이에 따라 지방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와 주민 즉, 지역에서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영역과는 연결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자립적 사업 추진 한계 존재
- 결국 지역은 추진 사업의 영역에서 한정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균형발전 사업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기존 사업들의 예산 변경 등의 수준으로 머물게 됨

○ 국가 중심으로 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어 지방의 중앙 의존성 지속

- 결국 지방의 내생적인 성장 방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 지향을 중심으로 외생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성장이 될 수 밖에 없음
-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보다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지역 간 경쟁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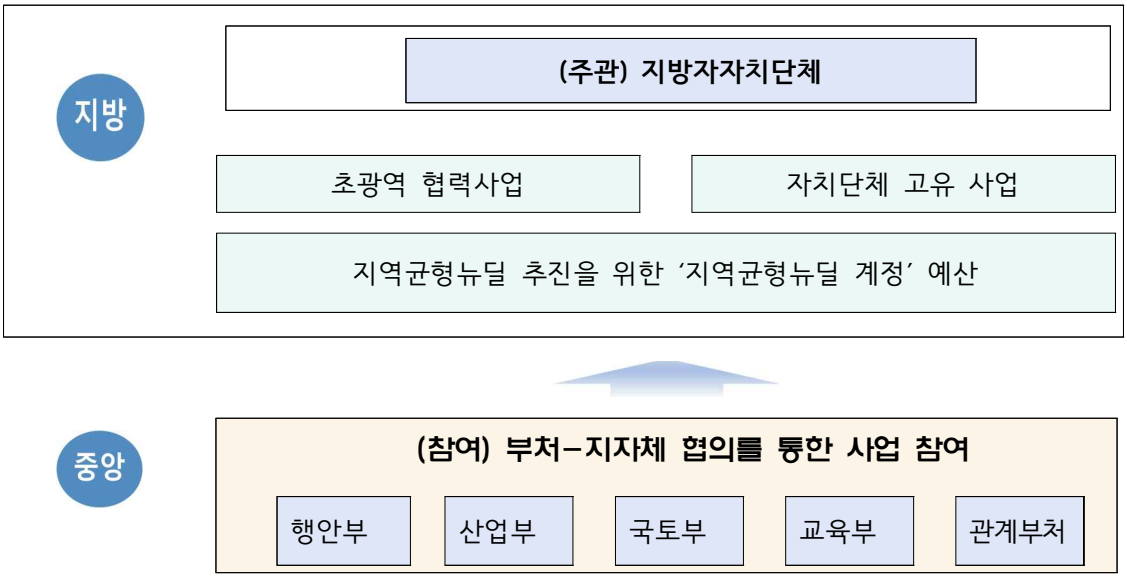
○ 지금의 추진 정책을 중심으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자면,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의 내생적이고 자립적 성장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뉴딜과 초광역협력 사업 등에서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는 국가 중심의 사업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방주도 추진 방식이 검토 될 필요가 있음

2. 지역 중심 뉴딜사업 추진 유형 전환

○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뉴딜 그리고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의 사업 추진에서 지속적인 매진은 지역주도와 지역의 체감을 통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역주도의 성공을 위한 관점에서 여전한 제약적 요인 중 하나는 사업의 신청과 선정의 방식이 기존 중앙주도 공모사업의 추진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중앙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귀결됨

○ 지금이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주도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면 새로운 방식의 추진 체계를 시범적으로나마 도전해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한정포괄보조금'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주도의 사업 체계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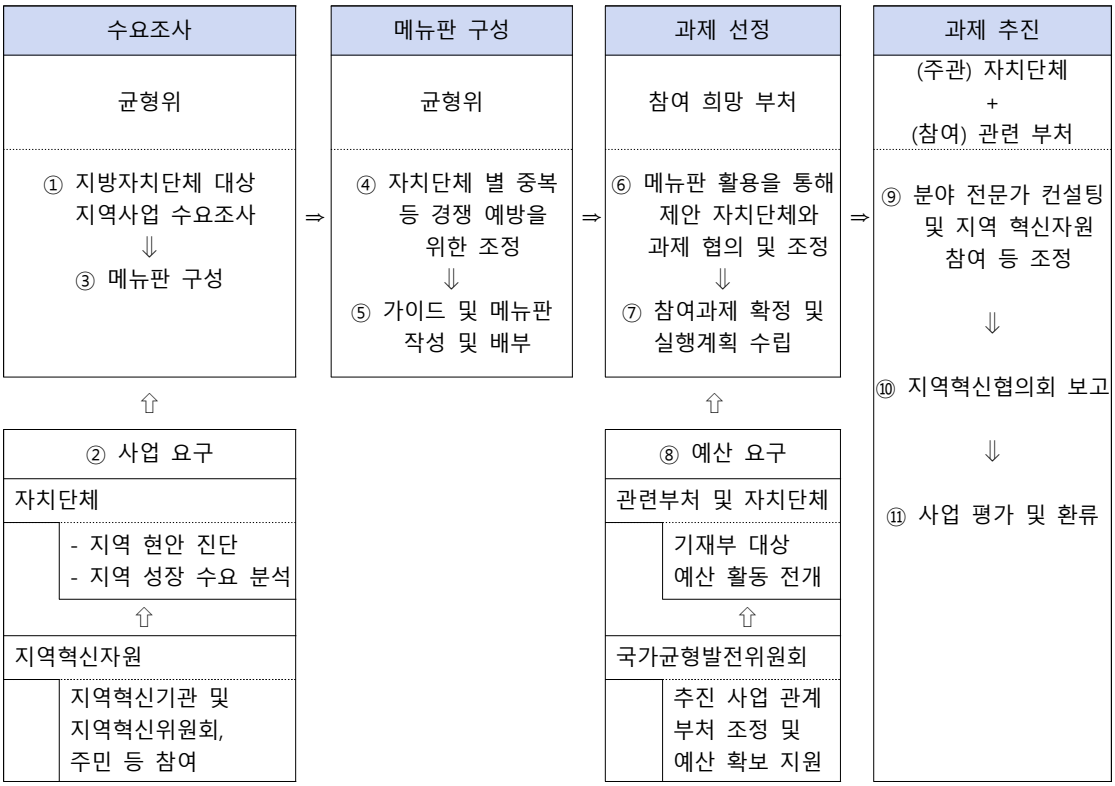
<그림 4-1> 지역균형뉴딜사업의 주도권 전환 예시

- 현재 균특회계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포괄보조금[12]의 경우 자치단체의 입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핵심 목표 또는 기능별 사업군을 포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예산으로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임

장에서 이미 투자된 사업의 계속 추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을 이끌기 위한 투자에 한계를 가짐[13)]

- 따라서, 지역균형뉴딜을 통한 혁신적 성장을 위해 그 활용의 목적이 세부 과제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정책적인 방향성에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인 방식에서 지역의 미래비전과 부합한 내생적이고 자립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정포괄보조금'을 제한함
- 구체적으로는 중앙이 기존 주도했던 사업의 예산 중 상당부분을 지역이 '한정포괄보조금'의 개념을 포함한 지역균형뉴딜관련 별도 계정을 지역 자율계정에 추가하여 편성한 후, 지역 또는 지역 간 도출된 성장전략사업에 중앙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재원으로 중앙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뉴딜의 주도권을 전환 시킬 수 있음



<그림 4-2>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 추진 절차(안)

13)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장점만을 흡수한 포괄보조금은 대상사업의 선정 및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더불어 포괄보조금의 자율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그 규모가 작어 시도가 실질적인 발전계획과 연계 활용에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 이와 함께 자치단체로의 주도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순서를 정리해 본다면 위 그림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 추진 절차(안)과 같으며, 제안된 주요 절차(안)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균형위에서의 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메뉴판 구성
- 자치단체는 필요사업을 구성하여 균형위 제출 및 중앙부처 배포
- 중앙부처는 메뉴판을 활용해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참여가능한 사업 및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 균형위와 관련 부처 그리고 자치단체는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을 개시하고, 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의 혁신자원 및 주민들과의 조정을 진행 후 추진

○ 이를 통해 지역 간 초광역 협력 등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적 한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지역의 내생적이고 자립적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의 경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마다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혁신이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 초광역기반의 지자체 간 협력사업 균형성장

○ 새로운 균형성장의 방식으로 메가시티와 함께 초광역 협력권 구성을 통한 성장의 방식이 언급되고 있음

○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22.1.11.)로 인해 초광역권이 정의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 대상이되어 초광역범위에서 경제와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틀을 짤 수 있게 되었음

- 반면, 이미 지역의 경제협력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메가시티의 경우 도시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연결된 것으로 지역의 또 다른 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역단위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

○ 초광역권의 특징으로는 메가시티가 가진 거점(중심성)의 가치와 지역의 기능

적 연결성을 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더불어, 현 정부의 초광역협력은 지역주도로 구성됨으로써 지역성장방향의 자율성이 부여되며, 국토교통 · 산업 · 인재 등 분야별 정책 도입 가능

○ 무엇보다, 초광역 협력사업의 경우 지역들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연계로 하나의 자치단체가 가진 비교우위의 지역자원이 타 자치단체와 공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협력권 전체의 밸류체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낮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려는 지역이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 가능

○ 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시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지역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점진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민체감 중심의 지역성장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뉴딜사업과의 연계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역 주도의 사업을 통해 자립적 그리고 내생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향식의 사업 흐름이 필요함

- 더불어, 중앙의 시선에서 보는 투입대비 효과성 만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선택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립적 추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지역의 전문집단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어야 함

- 이와 함께, 초광역사업의 추진에서도 광역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접형 연계 방식과 함께 기초단체들 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생활기반 부분, 자치단체들이 가진 거점 산업기반의 협력, 주변 기초자치단체 및 인접 동네에 이르기까지 주민활용 시설의 공유 등 주민체감형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지역균형뉴딜사업의 또다른 축을 구성함으로써 초광역사업이 지역에서부터 성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가능

○ 끝으로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지금까지의 다양한 정책들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정부의 추진과제로써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이름만 바뀌는 새로운 틀을 입힌 수준에 그침으로써 지역균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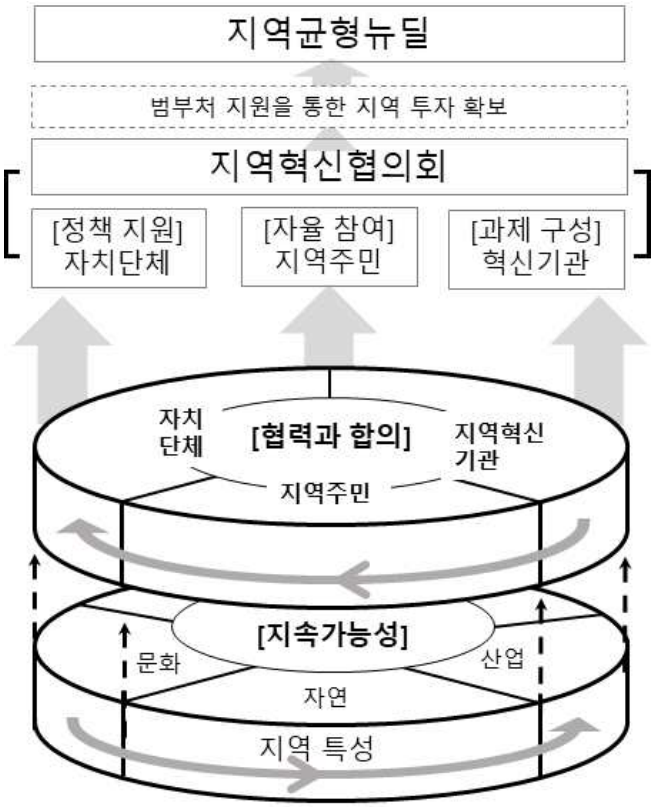
제2절 지역 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강화

1. 다주체(지자체 · 주민 · 혁신기관) 참여 지역주도 뉴딜 추진

○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사회적 합의(Deal)에 기반 한 지역균형뉴딜이 추진되도록 지역협력체계 강화 방안 필요

○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균형뉴딜 및 주민 주도형 뉴딜의 경우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 이와 함께 지역의 산업과 경제 분야에서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의 혁신기관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의 허브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전문적 능력 활용 필요



<그림 4-3> 지역 주도 균형뉴딜 추진 체계(안)

○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지역 의사결정 전문가 집단을 통한 사회적 대화 등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 현재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기관 등의 지역 기반 추진 예산 별도 마련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활동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뉴딜 과제의 기획 및 추진 역량 확보 가능

2. 지역 체감형 사업 강화 및 상향식(Bottom-up) 사업 발굴

○ 앞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균형뉴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사업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디지털과 뉴딜이라는 영역 보다 더 세밀한 영역 구분이 필요하고, 각 영역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영역 하에 몇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함

○ 보고서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디지털과 그린 영역 불문하고 1) 교육, 2) 문화, 3) 보건의료, 4) 복지, 5) 주민 안전, 6) 도로교통, 7) 유통, 8) 산업 및 일자리, 9) 환경 및 에너지, 10) 데이터 및 통신, 11) 건축 환경이라는 세부적인 요소로 구분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교육과 문화, 복지의 영역의 확대가 필요

<표 4-1> 주민 체감 강화한 지역균형뉴딜 영역(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의 지역 사업	1. 교육인프라 2. 문화 서비스 3. 보건의료 4. 도로 및 교통 5. 안전 6. 유통	1. 산업 (일자리) 2. 환경 및 에너지
지자체 주도	1. 도로 및 교통 2. 유통 영역 3. 보건의료 4. 생활밀착형 복지 5. 데이터 확산 6. 안전 7. 산업	1. 환경 및 에너지 2. 도로 및 교통 3. 건축 환경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8. 통신 9. 셍활인프라	
공공기관 주도	1. 생활밀착형 복지 2. 주민 안전	1. 산업 (일자리 및 기업 지원) 2. 에너지

주: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뉴딜 사업의 경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어 생활 인프라, 복지 등 뿐 아니라 나머지 영역도 분류는 여러 영역으로 각각 되어 있으나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중심

○ 도출된 새로운 지역균형뉴딜 영역(안)을 바탕으로 아래 표(예시)와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상향식(Bottom-up) 사업 메뉴판을 구성하여,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지방이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역균형뉴딜의 주민 체감과 수용성 확보 가능

<표 4-2> 자치단체 주도 지역균형사업 구성 메뉴(안)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유형	항목				참여부처	유형	항목				참여부처
		㉮	㉯	㉰	㉱			㉮	㉯	㉰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1. 교육인프라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교육	주민 대상 교육	ㅇㅇ	1. 산업 (일자리)	기술 교육	생산기능 인력 활용	인재 유치	일자리 창출	ㅇㅇ
	2. 문화 서비스	인프라	기록 사업	콘텐츠 산업화	계승 사업	ㅇㅇ						
	3. 보건의료	스마트 방역	예방 접종	어르신 건강 지원	스마트 건강 지킴이	ㅇㅇ						
	4.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지원	ITS 관련 기술 적용	첨단 이동체 실증	규제 완화	ㅇㅇ	2. 환경 및 에너지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 컨설팅	특허 지원	시험·실증 지원	ㅇㅇ
	5. 안전	스마트 안전 지킴이	스마트 안심 귀가	지능형 위험 알림	스마트 도시 인프라 연계	ㅇㅇ						
	6. 유통	비대면 유통 확대	스마트유통 실증	물류단지 구축	물류비 지원	ㅇㅇ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유형	항목				참여부처	유형	항목				참여부처
		㉮	㉯	㉰	㉱			㉮	㉯	㉰	㉱	
지자체 주도	1.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지원	ITS 관련 기술 적용	첨단 이동체 실증	규제 완화	ㅇㅇ	1. 환경 및 에너지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 거래	제품 상용화	시설 장비 구축 지원	ㅇㅇ
	2. 유통 영역	비대면 유통 확대	스마트유통 실증	물류단지 구축	물류비 지원	ㅇㅇ						
	3. 보건의료	방역	무료 기본 예방접종 확대	어르신 건강 지원	스마트 건강지킴이	ㅇㅇ						
	4. 생활밀착형 복지	365 돌봄 시설 확충	돌봄·키움 서비스	노인가구 건강지킴이	장애인 이동지원	ㅇㅇ	2.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지원	ITS 관련 기술 적용	첨단 이동체 실증	규제 완화	ㅇㅇ
	5. 데이터 확산	생활데이터 활용 서비스	정책지원 데이터 분석	지역산업 데이터 플랫폼	기업데이터 분석 컨설팅	ㅇㅇ						
	6. 안전	안전귀가 지원	야간시간 돌봄 및 안전케어	공사장 안전시설 지원	환경안전 지킴이 사업	ㅇㅇ						
	7. 산업	거점기관 구축	생산기능 인력활용	인재유치	일자리 창출	ㅇㅇ	3. 건축 환경	지역 공동체 협력 사업	설계 컨설팅	지역간 교류	규제 완화	ㅇㅇ
	8. 통신	무료 wifi	자치단체 전용망 구축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데이터 서버 공유 지원	ㅇㅇ						
	9. 셍활인프라	공원 및 여가시설 확충	네트워크 공간 구축	스마트 쓰레기 수거	교통망 확충	ㅇㅇ						

대분류	소분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유형	항목				참여부처	유형	항목				참여부처
		㉮	㉯	㉰	㉱			㉮	㉯	㉰	㉱	
공공기관 주도	1. 생활밀착형 복지	무료 wifi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장애인 이동 지원	주민 어울림 시설 구축	ㅇㅇ	1. 산업 (일자리 및 기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온/오프 기술 지도	인재 유치 산학 협력	창업 지원	ㅇㅇ
	2. 주민 안전	스마트 골목 구축 실증	안전 실습장 구축	교통 안전 공원 설치	스마트 무장애 이동 지원	ㅇㅇ	2. 에너지	시제품 제작 지원	시설 장비 지원	기술 고도화	기술 컨설팅	ㅇㅇ

주 : 본 표는 예시이며, 실제 사업 추진 시 항목, 유형 등 변경될 수 있음

제5장 결 론

1. 연구의 시사점

○ 2021년 10월 13일 ‘지역균형뉴딜’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목적에 정합한 과제발굴과 주민의 체감 정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

- 특히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이 아닌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내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더불어, 지역균형뉴딜이 지방정부와 주민 공동체 주도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과제 유형의 재설정, 발굴 절차 등의 새로운 방식을 탐색하여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살펴보고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기 추진된 지역균형뉴딜이 지역의 균형성장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으며,

○ 지역균형뉴딜의 추진현황과 초광역협력사업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했던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포착되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음

- 지역사회의 성장 방향과 맞닿지 않아 내생적인 성장의 한계를 지님
-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정책과 광역협력사업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주도의 테마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높은 중앙 의존성으로 지방의 내생적 자립적 기반의 구축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 무엇보다,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에서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어 지방의 외생적 요소 중심의 발전성향은 여전히 존재
- 지역들 간의 균형발전을 추동하기 보다 또 다른 국가예산을 목표로 하는 경쟁의 룰을 만들어 내는 위험성이 존재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생적이고 자립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균형뉴딜 등의 사업 추진 시 지역의 혁신자원과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제안했고,

○ 더불어 지금과 같은 경쟁으로 인한 또 다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지역균형뉴딜의 주민체감과 지역 자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제안의 요약

□ 지역 중심 뉴딜사업으로 지역의 주도권 확보

○ 지금의 포괄보조금의 수정적 개념을 이용해 지방이 주관하고,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역공모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내생적 성장 기반마련과 자립적 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사업 체계 확보

○ 지역 또는 지역 간 도출된 성장전략사업에 중앙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재원으로 중앙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주체(자자체 · 주민 · 혁신기관) 참여를 통한 지역주도 뉴딜 추진

○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지역 의사결정 전문가 집단을 통한 사회적 대화 등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 현재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혁신기관 등의 지역 기반 추진 예산 별도 마련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활동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지역균형뉴딜 과제의 기획 및 추진 역량 확보 가능

□ 초광역기반의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활용한 균형성장

○ 현재의 초광역협력은 또 다른 불균형을 잉태하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사업의 추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무엇보다, 초광역 협력사업의 경우 지역들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연계로 하나의 자치단체가 가진 비교우위의 지역자원이 타 자치단체와 공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협력권 전체의 밸류체인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낮거나,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려는 지역이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 가능

○ 특히, 광역기초들 간의 공간적 초광역방식의 사업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사업으로 사업의 방식을 확장함으로써,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국가균형발전의 지역균형뉴딜의 또다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역 체감형 지역균형뉴딜의 유형 분류 및 지역 주도 메뉴판 활용**

○ 기 추진된 사업에서 부족한 지역에 대한 포용력 확보를 위해 보다 더 세밀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체감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뉴딜 영역을 제안했으며, 특히 부처 주도가 아닌 자치단체 주도의 사업을 제안하고자 상향식(Bottom-up) 기획의 방식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메뉴판을 제시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민규. (202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협력: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토연구원

고병호. (20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방법론., 「도시행정학보」, 23(2). 169-197

곡성군. (2021). 2021년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계획서: 섬진강 상상더하기 미디어아트여행플랫폼. 2021. 6월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관계부처 합동. (2020).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1).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보도자료(2021.10.14.)

관계부처 합동. (2021).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2021).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구균철. (2018). 재정분권과 포괄보조금의 해외 동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85-3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1). 내부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금재덕 외. (2012).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297-321

기정훈, 조덕호. (2020). COVID 19 시대의 KOREA 뉴딜의 성공전략:교육뉴딜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2021). 국가균형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김우석・김형진. (2020).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3): 149-175

김홍환. (2021a).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6(3): 61-102

_____. (2021b).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성격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2 “ 289-320

당진시. (2021). 20201년 지역 균형뉴딜 추가사업 계획서: 융복합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2021년 6월

문병효. (200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세고권의 분배. 법제처

박경현. (2022). 거점과 연계 중심의 초광역권 공간전략.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2022년 1월 25일

원광희・박상원. (2011). 균형발전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충북연구원 정책이슈분석. 1-49

윤태범. (2020). 지속성 있는 지역발전과 지역균형 뉴딜. 열린정책 제8호

이재원. 2009.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한국지방재정논집. 14(1): 57-89

임동완・윤성일・문광민. (2020).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관련 논점 검토와 세부 실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AHP 기법의 적용.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4): 105-134

정은희・강신욱・박세경・김정현・강지원. (2014). 포괄보조금방식의 복지 분야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정화. (2017).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1-23

조기현. (2012).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1): 41-73

조형석・양지숙. (2021). 지역발전수준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간 관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3): 71-99

진승호. (202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목표. 국토연구원.

진종헌. (2021).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 지역균형뉴딜과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 2021년 10월 26일

최진혁. (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6(4). 143-170

춘천시. (2021). 2021년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계획서: 폐플라스틱 3D프린팅 순환경제 실증사업. 2021년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행정안전부. (2021).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보고서

황해동. (2019).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예

의 자율성과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GAO. 1995. *Black Grants Issues in Design Accountability Provisions*, GAO/AIMD.

Viteritti J.P., “Bureaucratic environments, dfficiency and equity in urban service delivery systems”. The Politics of Urban Services, Lexington: DC. Health and Company, 1982

〈홈페이지 및 기사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초점]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 출범. https://pcad.go.kr/section/board/bbs_view.html?seq=7004&PID=notice&select_tab=(2021.09.03.).

중앙일보. 뉴딜 160조 중 75조 지역에 투자…’빚잔치’ 부추긴다 비판도. https://www.joongang.co.kr/article/print/23893054(2020.10.13.).

한겨레. 지역균형뉴딜이 ‘뉴’딜이 되려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5141.html(2020-12-21).

한겨레. ‘한국판 뉴딜’ 성패 달린 ‘지역뉴딜’…“지역 주도성 살리는 게 관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5140.html(2020-12-21).